

제369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8 호

국회사무처

2019년7월11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상정된 안건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1

(14시03분 개의)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송파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정부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

하면서 대정부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0.98로 사실은 매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낮은 출산율은 일자리 문제나 또 높은 집값 또 교육 경쟁, 돌봄과 양육 등 다양한 문제들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암울한 결과라고 보는데요.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두 가지의 요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주거, 고용, 보육, 교육을 포함한 여러 요인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책도 그런 복합적인 요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몹시 곤혹스럽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기본계획을 좀 수정을 하면서 목표를 '삶의 질 제고'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수정한 이후에 어떤 성과나 문제점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목표를 예전에는 '몇 명' 하는 숫자로 제시했습니다마는 바꾼 것은 그런 목표, 출생률 제고라는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을 '삶의 질 제고'라고 간략하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주거를 지원한다거나 또는 출산과 보육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린다거나 또 출산후

가, 육아휴직을 포함한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드린다거나 하는 것 등등을 포함한 것이고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양성평등, 여성의 직업적 안정성 확보 이런 것 등등입니다.

아직 그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빠릅니다마는 그러나 0.98이라는 숫자가 나온, 숫자로 증명되듯이 낙관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남인순 의원** 이러한 대책이 실효적으로 되려면 국가재정이 획기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호미로 막지 못하면 나중에 포클레인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목적세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저출산·고령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을 짤 적에, 아직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낼 만큼 대담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저는 오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OECD와 IMF 등에서도 적자 재정도 감수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정부에 권고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남인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연속 정부의 추경을 살펴보니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재정을 확대를 해 오기는 했습니다. 확대를 해 오기는 했는데 추경이 초과 세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해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가채무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균형 재정에만 초점을 두고……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표에다가 저렇게 보였는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산 증가율, 더구나 추경까지를 포함한 예산 증가율이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초과 세수,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걸렸다 그리고 그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도 했다는 것은

적어도 확장재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그런 지적을 받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인순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가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은행의 신계정에 따르면 삼십몇 %로 내려갑니다만 구계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40% 선입니다.

OECD 평균이 110%, 미국·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전부 100%가 넘고요, 캐나다도 그렇고. 일본은 230%가 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러면 OECD 평균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게 국가채무비율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IMF나 OECD가 우리 재정여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확장재정을 권고하고 추경도 권고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40%가 되면 국가부도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사실 국가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총리께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아까 말씀하신 신계열 GDP 기준 개편에 따르면 채무비율 자체가 36%로 낮아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내년도 예산의 규모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국은행 계정의 업데이트도 있었고요 또 이런 확장재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이 국가부도 말씀을 주셨는데 정치권 일각에서 그런 우려가 있는 줄 압니다. 심지어는 ‘그리스의 길을 갈 거다’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국가채무비율이 190%가 넘지요. 우리는 40%고요. 설마 IMF가 우리에게 국가부도를 권고했겠습니까?

○**남인순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정

부 예산안이 약 500조 원 정도지요. 올해 예산보다는 6.2%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9.7%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가야지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한국은행의 계정 변경도 있었고요. 약간의 여유가 더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실제로 그런 필요가 생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또 미중 무역마찰 또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변수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방 압력에 대한 지속 등으로 굉장히 경제여건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용 부진이나 또 빈부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재인케어 재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고요. 또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늘어나는 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에 보면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지금 7년째 동결이 되어서 급·간식비가 그대로입니다. 지금 유아교육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뿐만 아니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 우리 총리님께서 다시 한번 의지를 표명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남인순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총리님께 제로페이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제로페이 사용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아직 사용 못 해 봤습니다.

○남인순 의원 사용 안 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남인순 의원 저는 요즈음에 어디 가거나 제로페이로 직접 결제도 하고 제로페이가 설치 안 된 곳에 가서는 제로페이를 설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로페이라고 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는 수수료가 0%이고요, 또 8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는 수수료가 0.3%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없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로페이 사용 실적을 보니까 올해 1월에 514건으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미했지만 7월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가맹점도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가맹점 등록하는 데가 일평균 2000건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게 사실 비용 지원을 정부가 해 주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그래서 앞으로 70만 개까지 점포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비용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76억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제로페이를 운영하려면 QR 단말기가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그런 장비 도입을 지원하는 등의 예산으로 76억을 반영했는데요 꼭 처리해 주시고 더 필요하다면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 결제가 가능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부는 9월부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은 11월부터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를 해 왔습니다.

○남인순 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남인순 의원 총리님, 최근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울리는 전세 깡투자, 깡통전세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빌라촌까지 침투해서 임차인들이 몹시 불안하다 하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사실은 깡투자가 아니지요. 이것은 거의 깡투기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

각을 하는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습니다.

○남인순 의원 정부가 지금 전혀 실태 파악을 못 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저는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실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 파악하시고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완화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리고 또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남인순 의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40대 정책 평가 중에서 2위로 평가받을 만큼 국민들의 호응이 높은 정책이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런데 지난 2년간 문재인 케어 추진 결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또 건강보험 보장률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거라고 추정하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즉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물론 단계별로 해 왔습니다마는 올 4월을 기준으로 보면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약 2조 2000억 정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2조 2000억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비가 한 8000억 정도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증환자들이 주로 부담하던 의료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1조 4000억 그래서 도합 한 2조 2000억 정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장성 강화 대책의 향후

전망은 2022년까지, 저희들이 현재 보장성을 한 63%에서 시작을 했는데 70%까지 보장성을 강화 할 것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단계별로,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러면 2022년까지 70%를 달성 하시겠다 하면 지금 2019년 현재는 몇 % 정도까지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병원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주로 이번에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많이 본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67.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로 잡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이제 한 2.8%p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규모가 좀 작은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64.4%,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대개 한 2%p 내지 5%p 정도씩 보장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일부 야당에서 문재인 푸어다, 먹튀 케어다라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재원 조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23년에도 누적수지를 11조 원 이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셨지만 작년부터 단기적 자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남인순 의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정책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예컨대 2022년 이후에도 지불준비금이 10조 원 이상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방안을 짜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신 건강보험료율 증가, 그것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2%씩 상승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수준 내에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조절할 것이고요. 그게 수입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국고지원을 지금보다 조금 더 늘려서 좀 더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할 생각이고 그리

고 어느 경우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출이 좀 더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거나 낭비적 요소를 일일이 저희들이 찾아내서 지출 효율화를 가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발표했던 의료체계 5개년 계획에는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의료비 1%를 절약을 하려고 했고 5년에 걸쳐서 3%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현재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1년에 한 70조 정도 씩입니다. 3%를 매년 절감을 시키면 약 2조 정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이후에도 지불준비금 10조 원 이상이 남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남인순 의원 장관님, 그 세 가지 방안 중에서 결국 국고지원 문제인데요. 지금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가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20% 범위 안에서 원래 국고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과소 추계를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점점 지원율이 떨어졌습니다. 액수로는 커졌는지 모르지만 지원율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입자 단체들이 이것 신뢰를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별반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전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17% 선을 유지하는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의원님도 방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고지원의 절대액 자체는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 자체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비율은 조금씩 떨어진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도 일단 내년에는 최소한 올해보다 규모도 커질 뿐만 아니라 비율도 좀 늘리려고 재정 당국과 열심히 협의 중에 있고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사후정산제도, 저는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후정산제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국고지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서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좀 더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1~6등급에

서 경증·중증으로 개편이 돼서 장애인 지원체계가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장애인 지원체계 전환이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3개의 국가 서비스나 2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서비스가 대상이 확대됐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남인순 의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문제는 약 250만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이번에 장애인정책 전환으로 뭐가 피부로 느껴서 정말 크게 변화됐다 이런 것을 느끼고 싶은데, 내년도 장애인복지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의 편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편성만 본다면 올해보다 한 5000억 정도 증가된 3조 300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지금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남인순 의원 그 정도 가지고는 장애인단체에서 전혀 큰 변화를 못 느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장애인연금만 보더라도 내년도에도 자연증가분 외에는 증액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 중복장애인만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경증·중증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증장애인한테는 장애인연금이 다 지급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단계적으로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장애계에서 지금 꾸준히 제기하고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1등급·2등급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3등급은 중복장애인의 경우만, 소수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2·3급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하고 4·5·6급을 경증으로 분류를 하면서 장애계에서 기대하는 것이 3급이 중증으로 분류되었으니까 1·2급이 받던 장애인연금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논리적인 합리성을 가진 그런 기대입니다. 그런데 3급 전체를 장애인연금에 포함하려고 하면 현재 장애인연금 주는 수만큼 100% 재정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재정적인 제약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역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거 기준으로 3급 장애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렵고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부터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장애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3급 전체에, 중증장애인 전체에게 연금을 확대해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밟아 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단계별로 밟아 가지되 제가 아까 총리님께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말씀드린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존의 실링하에서는 뭘든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남인순 의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이번의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기존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던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들고 또 종합조사에서 장애 유형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남인순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하고 여러 번 만났고요. 그리고 종합조사표도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종합조사표 뒤에 숨어 있는 매뉴얼 자체는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각 특성별로, 장애 유형별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고.

장애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도 현재는 102시간이 평균적으로 지원되는데 이번 제도의 결과 109시간, 7.2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장애인들이 심지어 ‘가짜 폐지’라고 이렇게 과격할 용어를 쓰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 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도 늘리겠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회에 보낸 장애계 예산이 올해 대비 19% 증액입니다. 복지부 전체 예산 평균이 10%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2배 정도 늘렸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링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현장의 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감사합니다.

○**남인순 의원** 법무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지난 4월에 발생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사건 기억하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그 사건의 이면에 스토킹이 있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스토킹으로 인한 여성 살해 범죄가 계속 있어 왔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남인순 의원** 이런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

○**남인순 의원** 스토킹 단계에서 이런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여러 가지 지금 일련의 스토킹이 사실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약 50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을 입법예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부처 간에 조금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 장관님, 스토킹 처벌법이 사실 20년째 국회에서 발의되고 통과되지 못한 게 여러 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19대 때도 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말 굉장히 면목이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스토킹 처벌법을 드디어 입법예고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1년 동안 왜 논의가 안 됐는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경찰청하고 의견 조정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청하고. 그 내용도 사실 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가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살해 범죄까지 이어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스토킹 하면 8만 원 범칙금 밖에 안 냅니다. 내몰리는 거지요. 살해 상황으로 내몰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하루속히 경찰 쪽하고 얘기를 해서, 경찰청의 주장도 잠정조치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거든요.

어쨌든 조율을 하셔서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는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경찰청과의 이견이라는 게 잠정조치를, 잠정조치라는 게 접근금지라든가 통신제한조치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긴급한 경우에는 지금도 가능합니다. 물론 사후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도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을 조속히 해소해서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인순 의원** 꼭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남인순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촛불시민들의 열원입니다. 촛불정신 실천에 온 힘을 다해서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사는 포용적 복지국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남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 예산·홍성 출신 홍문표 의원입니다.

물을 것이 많아서 총리님이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사말은 생략하고 직접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의 11개 도시에 지금 혁신도시가 다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홍문표 의원** 충남·대전만 혁신도시가 없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전·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15년 동안 혁신도시가 없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홍문표 의원**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

니다.

실례로 혁신도시가 없다 보니까 대전·충남은 인구가 20만 명이 줄었습니다. 12만 평에 달하는 면적이 감소했으며 경제적 손실은 25조 2700억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378억이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재정적·인적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전·충남의 역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4일 본 의원이 1차 토론회를 했고 12월 17일 충청도청에서 2차 토론회를 했습니다. 어제 바로 국회에서 3차 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야 의원 20여 명을 비롯해서 충남도지사, 대전시장 등 약 5000여 명이 공감대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총리께서 지난 1월 19일 홍성군 광천 장날에 장을 방문하셔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꼭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15년 역차별에 의해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충남과 대전에 있는 도민과 시민들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이 부정적인 답변 한 말씀에 우리 여당의 의원님들은 총리의 눈치를 보고 있고 그리고 도민과 시민들은 총리가 반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염려에 술렁거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충남과 대전의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은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관철시켜야 된다, 15년의 역차별을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고 충남도민 53만 명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총리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불합리한 말씀을 하셔서 1월 30일 날 제가 등기로 총리님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발의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저로서는 참 난처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첫 꼭지로 안 할 수 없어서 질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15년 전에 대전·충남을 혁신도시 대상에서 빼 준 것은 세종시가 있었고 그 이전에 대덕연구단지, 또 대전에 정부제2청사 등등 있어서 많은 공공기관이 갔다는 판단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 15년 전에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습

니다만 현재에는 혁신도시를 추가 지정할지의 여부는 혁신도시 전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지역만을 놓고 결정하기에는 조금 더 검토 대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홍문표 의원** 총리님, 제가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물은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 이낙연** 예, 좋습니다.

○**홍문표 의원** 혁신도시가 충남·대전만 15년 동안 없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기자가 물으니……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년 전의 사정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홍문표 의원** 아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또 검토가 필요합니까? 대전·충남 합쳐서 20만 명의 인구가 줄고 12만 평의 땅이 지금 손실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타 지방에서 볼 때나 중앙에서 볼 때는 세종시도 결국 충청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전에 정부제2청사가 있었고 그러나……

○**홍문표 의원** 그것은 다르지요. 세종시의 세수와 인구와 행정적인 모든 지표의 상황은 완전히 세종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가 가니까 대전과 충남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15년 동안 여기에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만한 손해를 봤으니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총리로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혁신도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전·충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그러니까 이미 혁신도시가 11개 시도에 가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15년을 늦은 데 대해서는 정부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을 찾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또 이것을 연구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잠깐만요, 15년 전에 어떤 정부였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대전·충남을 뺐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홍문표 의원** 아니,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15년 전의 논리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제 말씀을 조금 들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대전·충남, 심지어 충북까지 갖고 계시는 피해의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홍문표 의원** 총리님이 지금 딱 말씀을 하시는데 충북은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단지 우리나라에서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가 지금 15년째 없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충북도……

○**홍문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현재 세워 주셔야지 15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자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충북을 거론한 것은 충북 또한 세종시로 이익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 때문에 손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문표 의원** 그러면 총리께서 결론은 이것은 검토 대상으로 있는 것이지 15년의 피해를 보고 어려웠던 것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문표 의원** 그러면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 시도민들께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여당 사이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문표 의원** 그러면 그대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 대전·충남의 시민과 도민들이 오늘의 총리의 말씀에 아마 엄청난 실망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것은 과거는 어땠든 오늘 우리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라도 나가 주셔야지 15년 전 얘기를 하고 오늘의 상황을 또 연구하고

검토한다? 도대체 이런 놈의……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저한테 무례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홍문표 의원 자, 더 이상 총리님 얘기 들어 봐야 그게 그래서 그만 이것으로 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 보고에 의하면 대한노인회 자살률이 5년 연속 세계 1위라는 것은 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홍문표 의원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대한민국 노인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 자살률 5년 연속 한국이 1위를 합니까?

총리님,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노인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36년 일본에 나라 뺏겼을 때도 독립의 주체가 노인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공산군을 물리친 것도 오늘의 어른들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를 원조를 주는 나라로 만든 것도 오늘의 노인들이 장본인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노인은 지금 765만 명으로서 인구 전체의 14.8%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48만 명의 노인이 증가하여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 천만 노인국가시대가 바로 눈앞에 닥쳐왔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보건복지부 내에 노인정책국 4명이 현재 조직으로 오늘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현재 11개 부처 27개 과에서 1년에 9조 6200억 원에 달하는 56개 노인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청이 만들어지면 유사 중복되는 11개 사업, 1조 3586억 원의 사업비가 절감되고 노인복지 업무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노인도 이제는 자식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이웃에게 폐 끼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노인복지청 이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한 말씀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대한노인회에서 제가 오늘 대정부질문을 한다니까 이러한 주문을 해 왔습니다. ‘노인을 폐품으로 취급하지 말아 달라’ 꼭 본회의에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각 정당과 국회에서 노인 폄하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데 노인을 한 가정의 부모에 가장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765만 명 노인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년 선거에서 투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꼭 본회의에서 말씀해 달라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의 노인복지청에 대한 견해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의 충정을 존중합니다. 정부 내에서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정부 내에서 상의하시는 것으로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홍문표 의원 예, 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리님, 4대강 16개 보, 물이 없는 곳에 물을 공급하는 물의 고속도로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이용해서 식수와 생활용수, 산업용수 그리고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이 홍수 조절과 가뭄대비 사업도 바로 이 4대강 16개 보가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국가산업시설을 4대강 보를 해체 내지는 상시 개방하기로 정부가 결정해 지금 진행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보 철거 이유는 녹조 현상을 막고 수질 생태계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보 철거 이유는 너무 허술하고 현실성이 없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녹조는 인이 발생했을 때 발생의 원인이 폐수입니다. 농약과 비료, 가축 폐수, 가정용수 폐수 등이 마구 강과 저수지로 들어갔을 때 25도에 인이 작용해서 녹조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외국 선진국처럼 이러한 폐수가 들어가지 못하게 수로차단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녹조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인데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4대강 보를 부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설픈,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요.

수질 개선은 지류하천사업을 해서 이 보를 부셔서 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논과 밭으로 물을 흘려보내면 이중 삼중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전혀 생각지 않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를 부셔야만 된다 이런 저급하고 상식에 벗어난 것을 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4대강 보에 관해서 정부의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사평가위원회가 다섯 가지 기준을 놓고 4대강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현지 사정, 주민들의 의견을 더 감안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물관리위원회는 좀 더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홍문표 의원** 그러니까 총리의 답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물관리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궁화 꽃이 대한민국 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홍문표 의원** 그런데 법적인 지위를 받아 갖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떻게 돼 있던가요?

○**홍문표 의원** 무궁화는 대한민국 나라꽃,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우리는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법적 지위를 받고 있지 못해서 무궁화가 지금 우리나라 꽃이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을 총리께서 미리 아셨으니까 무궁화는 나라꽃이다, 법적 지위를 빨리 받아서 대한민국 꽃은 무궁화 꽃 이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또 세계 만방 국가에 알려 주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일이다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육성으로 한 꼭지만 더 해도 됩니까, 의장님?

제가 준비를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1분만 봐 주십시오.

총리님 들어가시고요.

행안부장관님 잠깐 나오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통장 처우 개선에 관한 것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 그 내용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육성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6월 13일 날 더불어민주당 당정책회의에서 이·통장에 대한 10만 원 인상 그리고 처우에 대한 것을 발표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당정 정책협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 장관님은 솔직히 이 부분 잘 모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그동안 존경하는 홍문표 의원님도 여러 번 그런 주장을 하셔서……

○**홍문표 의원** 제가 장관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할 때 민주당 수뇌부에 계신 분들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또 2년 동안 내가 이것을 네 번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행안위원회에서 이것 엄청나게 공방을 하고 따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관님하고 이렇게 15명이 몰려와 가지고 10만 원 올려 주겠다 그리고 지방비로 주겠다 이렇게 선언해서 기자회견을 해 버려요. 이것은 정책 날치기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내년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니까 부랴부랴…… 대한민국의 이·통장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까? 이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날치기식으로다가…… 정책을 이렇게 쓰는 것 아닙니다.

저는 참 분개를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공청회, 토론회, 여덟 번, 여섯 번, 전문가 모시고 할 때 마다 전부 의원들한테 연락했을 때는, 정부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10만 원 올려 준다고 했는데 마침 10만 원 올려 준다고 하면 이·통장들이 전부 나와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반대…… 이분들이 설명을 했어요.

(「의장님,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문희상** 정리하시지요.

○**홍문표 의원** 적어도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자기들 여건 좀 갖춰 달라는 것이고, 시군의 자치비로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국비로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비로 다 떠넘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들이 전부 지금 사방에서 전화 와서 난리입니다. 국가가 할 일을 왜 시장·군수한테 떠넘기느냐……

(「시간 다 갔어요」 하는 의원 있음)

시간 없으니 내가 양해를 구했는데, 이런 것을 장관께서 아서 가지고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한 사람이 대가 받는 사회로 가야
지 노력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와서 날
치기 식으로다가 정책을 도용해서 기자회견하고
국민에게 내가 했다고, 내 정당이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문희상 정리하십시오.

○홍문표 의원 장관께서 이 문제를 살펴보셔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문희상 홍문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출신의 바른미래당 하태
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泰慶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해운대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대한민국은 단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난입니
다. 대한민국이 외부에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
본이 안보 위협을 핑계로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
니다. 국가가 공격받고 있을 때 그 국가를 지키
는 최전선에 보수가 서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 단결하도록 보수가 가장 헌신해야 합니다. 그
것이 진짜 보수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본 언론의 한국 공격이 강해지고 있는
데요. 며칠 전에 한국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
출했을 수 있다,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원재료
다.....

한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불화수
소를 밀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문희상 의장, 주승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사실이 없고요 일부 기
업에서 전략물자를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마다 적발했고 역류 조치를 취하거나 또 유엔 제
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본 의원이 아주 충격적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아침에 공개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발표한 부정수
출 사건 개요라는 겁니다.

밀수출, 불법 수출을 일본에서는 부정 수출이
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에 보면 북한에 불화수소

를 밀수출한 나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
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
보센터, 영어로 시스텍(CISTEC)이더라고요. 이
기관에 대해서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
리 한국무역협회의 전략물자정보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곳으로 압니다. 비정부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신력을 갖는 전략물자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러면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것
이나 매한가지겠네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겠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합니
다.

○河泰慶 의원 불화수소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 핵무기 개발이나 생화학 무기에 이용될 수 있
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까지 북한으로 밀수출한 것도 있고 하려
다가—탱크로리 하나만 그렇습니다—적발된 사례
들도 보고되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 측정기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일본 기업
인 미쓰도요의 대표이사과 임직원이 최대 징역 3
년을 선고받았고 4500만 엔의 벌금도 냈다고 합
니다. 일본이 말 그대로 블랙리스트 국가가 되었
는데요.

사실 일본이 더 문제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를
안보 위협을 핑계로 지금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
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근거도 없이 또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안보에까지 관련지어서 이
번의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
지해 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
단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어제오늘 보도
된 바에 따르면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의 유출에 의
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여론전
에서 우리가 많이 밀린다고 합니다. 문희상 의장
님 어디 가셨네요. 문희상 의장님이 평소에 말씀
을 많이 하시는데 외국이나, 특히 미국 가 보면

일본에 너무 밀린다, 한국의 국제 파워가 너무 약하고 특히 여론전, 홍보 너무 약하다.

사실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오히려 일본이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에 이번 일본 경제 제재와 관련한 국제홍보단 같은 걸 발족을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이걸 제대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들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의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한 것은 한일 갈등을 더 심화시켜서 끝장을 보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팩트를 알리고 진실을 알려서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한번 풀어 보자.

어쨌든 국제관계는 또 힘이 필요합니다. 힘에 기반해서 우리가 신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개를 했고 제가 공개한 자료는 2013년 전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3년 이후 자료도 찾으셔서 가지고 꼭 지시를 해 주십시오. 찾아서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특히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한일 양국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지 않아도 일본의 험한, 그에 따른 반응으로서 한국에서의 반일 이런 대응과 맞대응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상황은 몹시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 지도자들 그리고 저도 그중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국 측도 지혜를 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선거가 임박했습니다만, 선거 때는 거칠어지기 쉽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 이것을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저의 우정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河泰慶 의원 우정이라는 말에 제가 특별히 관심이 갑니다. 총리께서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사회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교육부에 여러 쟁점이 많은데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고맙습니다.

○河泰慶 의원 부총리께서는 법률 불소급 원칙이 뭔지 아시지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민들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어떤 법률이……

○河泰慶 의원 대원칙, 그렇지요. 일반론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급돼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河泰慶 의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河泰慶 의원 그게 왜 필요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는……

○河泰慶 의원 예. 그게 왜 중요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법적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과 원칙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河泰慶 의원 그렇지요? 오늘 정한 룰로 옛날 일을 다 처벌해 버리면 사람들이 불안정해서 못 살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지요.

○河泰慶 의원 사회 안정성이 파괴되고 갈등이 심해질 것 아닙니까?

저한테 윤창호…… 제가 윤창호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윤창호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윤창호 사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윤창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河泰慶 의원 그저 마음은 꽤 씹히고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게 사회이고 그게 법이어야 우리 사회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이 깨지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혼란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렇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리고 화면 잠깐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행정에도 이런 불소급 원칙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3조에 보면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 학기 평가는 그 학기 전에 마련해서 공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불소급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河泰慶 의원** 또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입니다. ‘교육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이것도 당연한 것이지요? 올해를 평가하고자 하면 그 전해 8월 31일까지 기준을 마련하고 통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河泰慶 의원** 알겠습니다.

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방금 제가 부총리…… 불소급 정신,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河泰慶 의원** 총리께서도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물론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사후에 나온 법이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행위 당시의 법률이 아니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렇지요. 극히 예외적인 특별법이나 옛날 반민족행위자법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사고 문제로 지금 국내가 내전입니다. 정부가, 교육부가 이번 시·도교육감이 진행한 자사고 평가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한 후에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제가 살펴본 건데요. 두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고와 상산고인데, 화면 좀 올려 주세요.

해운대고 평가 기간이, 평가 대상이 됐던 기간이 저기 화면에 보면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4년간입니다. 그 기간에 해운대고의 여러 가지 실적들을 평가를 한 것인데 만약 저렇다면 평가기준을 통보하는 시점은 언제가 되어 맞습니까, 총리께서 생각할 때?

○**국무총리 이낙연** 당연히 그 적용 이전에 통보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2015년 3월 1일 전에 통보가 되어 되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습니다.

○**河泰慶 의원** 그런데 실제 통보 시점 한번 열어 주세요.

2018년 12월 31일 날 평가기준이 그 학교에 통

보됐습니다. 점수가 미달이 됐습니다.

상산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산고는 평가 대상 기간이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 최근 5년간입니다. 저것도 당연히 평가기준이 통보되는 시점은 2014년 3월 1일 이전이 되어 되겠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한번 열어 보시지요.

2018년 12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만약 2018년 12월에 평가기준이 통보가 됐다면 평가 대상이 되는 기간은 12월 이후여야 되겠지요? 19년 것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 자사고에서 떨어진 모든 학교가 저렇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부터 19년까지인데 전부 다 2018년 12월경에 평가기준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돼서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서울은 2014년까지만 해도 커트라인이 60점이었습니다. 60점 이상 받으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 말에 70점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상산고는 거기다 10점 더 보태서 80점으로 통보됐습니다.

교육행정이 이러니까 우리 사회 갈등이, 사회 안정성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아는 한 이렇습니다.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확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단지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아니면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더 커지는가 이것을 보겠다는 평가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그대로 여기 적용될지는 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교육부의 동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청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교육부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법령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점을 뒀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동의 여부를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河泰慶 의원** 제가 문제인 정권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살펴보니 박근혜 정권 때도 똑같이 했어요. 차이점은 2014년에 한 번 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자사고를 다 살려 주는 쪽으로 임의로 적

용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가급적 죽이는 쪽으로 한 겁니다.

물론 자격 미달인 학교가 있을 겁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자격 미달인 학교가 자사고로 인정이 됐던 적이 있을 것이고, 이번에는 자격 미달이 아닌데도 떨어진 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상사고는 그렇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 정권을 넘어서 교육부가 독재를 해 왔다는 겁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데, 법령에도 위헌 법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위헌 시행령이 있습니다. 헌법의 대원칙, 상식에 기반하지 않은 이런 틀을 가지고 교육부가 전횡을 해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이 불신을 받는 것이고 교육부 자체를 폐지하라는, 정권과 상관없이, 그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서 답변을…… 물론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시행령 자체가 불소급 원칙을 깬 시행령이다, 기준이다, 그런 시행령이 적용되고 있다면 총리께서 이 시행령은 고쳐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쭙보고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의 얇은 생각만 가지고 당장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새기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저는 총리님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에 기반해 있고 우리 헌법 정신을 가장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점에서 저와 잘 통합니다.

총리님께서 제가 어느 당파적인, 정파적인 이익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정신과 상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총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교육부장관께서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 총리님께 여쭙어봤습니다.

좀 긍정적인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한 취지를 교육부도 충분히 경청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절차를 저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河泰慶 의원** 감히 주장합니다.

이번에 시행된 자사고 평가 전면 무효화해야 됩니다. 대한민국헌법과 상식을 위배했습니다. 새로운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년 뒤에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우외환입니다. 외환을 이겨 내려면 대한민국이 단결해야 되고 그 전제조건은 정부가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불신을 받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가 있을 때는 결코 우리가 단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주승용**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경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경미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OECD는 현재 중학교 학생이 사회에 진출하는 2030년대에 필요한 미래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역량을 키워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OECD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래를 대비해 사이언스(Science), 테크놀로지(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매스매틱스(Mathematics)의 앞자를 딴 STEM 교육 예산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수학, 정보, 과학기술의 약자인 MINT 교육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도입하면서 토론식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300개가 넘는 대학에 AI 학과를 설치하면서 AI 전문가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학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게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5·3·3체제로 개편하고 정보기술 교육의 강조와 더불어 창조적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치열한 인재 양성 경쟁,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래 교육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교육 이슈가 정쟁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 무거움을 안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야당에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제입니다.

부총리님, 현재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국정인가요, 검정도서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정 교과서입니다.

○박경미 의원 국정 교과서는 말 그대로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입니다. 야당에서는 교육부가 불법으로 교과서 수정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국정 교과서 수정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국정 교과서의 수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국정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지시할 수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 삼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경미 의원 그러면 일단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인데 여기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의 수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 의원 그러면 이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우는 왜 수정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이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경우 이번이 아니라 2018년에 사용한 6학년 사회 교과서입니다.

○박경미 의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2018년에 사용하는 6학년 사회 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기술되어야 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일관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박경미 의원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라고 기술되어야 합니다. 2012년도 사회 교과서에서도 그

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것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변경을 했고 그렇게 잘못 바뀌어진 것을 다시 제대로 교육과정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맞게 2018년도에 사용하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박경미 의원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체제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경미 의원 저도 여러 번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집필했고 또 교육부로부터 수정 지시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초등 사회 교과서,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지 않게 집필되었다면 국정 교과서의 수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하신 박용조 교수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잘못 바뀌어진 것을 바로잡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과정은 옳은 것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정상화 과정입니다. 법적으로도 타당한 일인데 이를 불법으로 호도하는 주장,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장관님께서 당시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던 만큼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이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문제 어떻게 다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 것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화하고자 시도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시대적 변화에도 맞지 않고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반대에도 부딪쳤고 그 과정에서 국정 교과서는 폐기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검인정 교과서를 다시 국정으로 돌리려고 하는, 발행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인 사회 교과서에서 수정되는 내용은 교육과정에 맞게 바꾸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경미 의원 그러니까 하나는 발행 체제의 문제이고 하나는 내용 수정의 문제,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지요.

이런 소모적 논쟁이 발생한 이유는 국정 교과서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맞습니다. 현재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외국에서는 벌써 교과서의 자유발행제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교과서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뀐다는 비판과 또 국민적 여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 체계 자체에서 꼭 필요한 인성의 함양이라든지 최소한의 국가적인 동일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정 교과서로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교과서들을 검인정화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1월에 초등학교는 사회와 수학, 과학 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전환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초등학교도 사회, 수학, 과학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서 발행 체제를 바꾸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 발행 체제는 국정,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는데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인정이나 자유발행제 쪽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도 교과서를 점진적으로 인정, 자유발행제로 바꾸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고맙습니다.

○박경미 의원 요즘 가장 뜨거운 현안이 자사고입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실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먼저 올해 시·도교육청에서 평가를 끝낸 학교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동의 여부를 신청하게 됩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전체 42개 자사고 중에 24개 학교가 이번에 평가를 받았고요. 그중에 13개 학교가 재지정받았고 11개 학교가 지정 취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사고는 2009~2010년에 54개 학교가 급속하게 생기면서 5년마다 5년 주기로 시·도교육감이 평가를 하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5년 주기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2014~2015년에 1차 평가를 받았는데 2009~2010년 당시에 평가기준이 7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2015년 평가기준을 60점으로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설립 취지에 맞게 자사고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학교가 재지정받는 형식적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사고가 설립된 지 이제 10년이고 지난 5년 과정의 평가가 부실했다고 하면 이제 10년 차, 올해와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작년 18년부터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만들었고 전체적으로 70점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전북이 좀 예외이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인 권한은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감의 권한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4개 학교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운영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그중에 11개가 취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교육부 동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서울과 전북과 경기는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결정하고자 하고요. 저희 교육부도 요청이 오면 지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지정위원회 절차를 밟아서 서울, 경기, 전북은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하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친 후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그것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체로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적인 결정이 저희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서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 지금 전북과 경기의 경우에는 다음 주 말 정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전북, 경기……

○박경미 의원 그다음에 서울은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7월 말 정도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전북·경기·부산이 청문 절차가 끝난 데고요.

○박경미 의원 예.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래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사고라고 통칭을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성격의 학교들이 있지요. 상산고와 같은 전국 단위 학교도 있고 서울에서 재지정 취소가 된 8개의 학교같이 광역 단위도 있습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원조 자사고도 있고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자사고도 다수 있고요. 또 수능 위주 교육으로 입시 학원화된 학교도 있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수시를 대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특성들이 고려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원래 자사고가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자 해서 설립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0년을 평가해 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치중되는 학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했는지,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의 내용은 얼마나 충실하게 잘 채워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평가지표에 따라서 저희는 절차상에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지표의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 흔히 자사고 폐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정확하게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사고 폐지라는 다섯 글자만 부각되고 사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어떤 지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말씀대로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것이고요.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학교들은 자사고로 입학한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사고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고로 신입생들, 들어오는 학생들 교육과정의 전환기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고 좀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동안 10억에 걸친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어제 10억을 지원하겠다고……

○박경미 의원 매칭을 해서 20억까지 지원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발표를 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3년 동안 20억의 예산 지원과 또 그 외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 자사고에 대한 수요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에 대한 갈증에서 기인하는 만큼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교육 강화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좀 밝혀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 말씀 굉장히 공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고등학교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한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구분해서 그 학생들에게 입시 중심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현재 미래 교육의 역량을 갖추는 교육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고등학교 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특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고등학교 모든 과정이 교과선택제라든가 고교학점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교육과정의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일반고등학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왔는데 8월 초에 저희가 이것을 종합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학교별로 많게는 한 1000억에 가까운 그런…… 그러니까 저희 부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확대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미래 역량을 갖춘 학생들의 교육과정 다양화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경미 의원 자사고 문제는 결국 고교 체계 개편으로 귀결되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긴 호흡을 가진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수행하는 게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경미 의원 사실 교육은 어떤 분야보다도 정

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학 입시가 바뀌면서 혼란과 피로감이 큼니다. 그만큼 국가교육위원회에 거는 기대도 큰데요.

부총리님,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성격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교육의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교육이 정책의 중심에 있다, 그런 것 때문에 교육정책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그래서 교육부 폐지의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을 정말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독립된, 좀 더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미래 교육의 비전을 설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중립적·독립적 지위를 갖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에 논의 중인데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 국가교육위원회가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박경미 의원** 이회창 후보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국가미래교육위원회 등등등 해서 거의 모든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었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대표성이 매우 중요하지요.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도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표성과 중립성을 담보할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지금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발의된,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는 대통령과 국회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하고 또 대표성을 가진 교육단체들에서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모든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19명으로 구성되게 되는 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 지명이 5명이고 국회 추천이 8명이고 교원단체, 대학 그리고 당연직이 각 2명씩 해서 19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적 구성이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보여지신다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여야 의원님들이 합의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구성과 운영의 수정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더 조속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미 의원** 미국에 ‘프로젝트 2061’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2061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헬리혜성이 지구에 근접했던 1985년, 헬리혜성의 76년 주기에 맞추어서 1985년을 기준으로 76년 후인 2061년을 겨냥한 과학교육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도 새로운 교육 100년을 만들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부총리님, 우리나라 고등학교 진학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99.7%,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박경미 의원** 예,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치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박경미 의원** 국공립 고등학교 연평균 학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고등학교는 연 한 16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의원** 3년이면 480만 원, 고등학교 자녀가 2명이고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가세하면 크나큰 부담이 되겠지요.

OECD 36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어떤 분들이 특히 혜택을 받게 되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도 교육비 지원을 받아 왔고요. 그런데 영세한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소규모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그런 가구는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 160만 원에 이르는 고등학교 등록금 등 고등학교 학비를 그런 분들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박경미 의원** 부모의 소득 격차가 자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고교 무상교육은 지금 실시해도 만사지탄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였습니다만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공허한 공약으로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 당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 당국과 시·도교육청과 재정 분담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지난한 과정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과 또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협력을 해 주셨고요.

박근혜정부하에서도 2017년까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 학년 전면 실시 계획을 했었는데 재원 분담에 아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 합의가 됐다면 진즉에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어렵게 합의한 재정 당국과 교육청 그리고 지방정부까지의 분담 비율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올 2학기부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미 의원**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했듯이 고교 무상교육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고맙습니다.

○**박경미 의원** 이낙연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경미 의원** 미세먼지 주무부처는 환경부지만 학교 미세먼지는 교육부, 어린이집과 노약자 시설의 미세먼지는 보건복지부, 이처럼 다부처 사

안인 만큼 국무조정실에 미세먼지기획단을 만든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일평균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35 μ g입니까?

○**박경미 의원** 예, WHO 기준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십……

○**박경미 의원** 25 μ g/m³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경미 의원** 초미세먼지 기준을 최소한 WHO 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지금 우리의 기준은 미국·일본과 같은 기준입니다. 목표를 높게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또 우리가 실현이 쉽게 안 되는 목표를 덜렁 내놨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 가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더 맑은 공기를 국민들께서 향유하셔야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박경미 의원** 미세먼지 대책은 다각도로 모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지하화해서 차량은 지하로 운행하게 하고 차가 다니던 지상에는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도시의 허파를 만들게 되면 공기질 개선 효과와 더불어 요즘과 같은 더위의 열섬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의 랜드마크도 조성될 수 있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스페인 마드리드 M30 고속도로 주변이 변화한 모습입니다. M30은 원래 도심을 순환하는 지상 도로였는데 차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보스턴의 빅딕(Big-Dig) 프로젝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녹지도 확보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초구를 지역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총리께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또 도시의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대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시야에 넣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박경미 의원** 가능하면 가까운 시야에 놓아 주

시면 좋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팩트에 기반하면서 핵심 내용은 왜곡하고 조작합니다. 언론보도 형태를 흉내내기 때문에 사실과 구별이 쉽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는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1야당의 대표와 대변인의 SNS가 악질적인 가짜뉴스의 근원지가 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작년 베트남 방문 시 방명록에 남긴 글이 김일성 주석 찬양글로 둔갑해 SNS에 퍼졌는데 가짜뉴스 피해 직접 당해 보시니 어떠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황당했지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끈질긴 생명력을 갖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미 의원**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자유지수는 2017년 63위에서 2018년 43위로 20계단이나 수직 상승했고 올해는 41위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경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가짜뉴스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언론계에 오래 계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 최고입니다만 언론의 신뢰도는 조사 대상국 중에 부동의 꼴찌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신뢰받는 언론이 아니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박경미 의원** 자유한국당에서는 최근 미디어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특위 첫 행보로 여성당원들의 엉덩이춤 논란을 보도한 한겨레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는데요. 내용인즉 ‘당원들이 속바지를 입었는데 한겨레가 속옷이라고 보도했다. 황 대표가 장기자랑 전반을 격려했는데 문장 배치상 속바지 퍼포먼스를 격려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참 어이가 없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것은 저……

○**박경미 의원** 총리님, 가짜뉴스 정말 위험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국회에 그에 관한 많은

법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면 좋겠고요,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언론과 각 매체들의 자율정화에 기대합니다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리터러시(literacy)’라고 합니까? 언론을 보고 진위를 판별하시는 힘 이런 것을 가지시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경미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중요하지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서러운데 지역 갈등과 세대 갈등 이제는 젠더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이리저리 갈라지고 있고 그 틈바구니에 혐오문화, 혐오 발언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당이 허구와 증오의 가위를 들고 이 균열을 밑그림 삼아 가위질할 것인가, 아니면 갈라진 곳을 진실과 화합의 실로 연결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차분히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주승용** 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남구울릉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남구울릉군, 독도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의 박명재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개각에서 유임되시고 11월경에 총리직에서 물러나셔서 야당의 선거사령탑이 돼서 내년 4월 총선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맞는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 의견 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그러면 내년 총선에는 출마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로서는 제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재 의원** 그렇습니까.

총리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회동을 둘러싸고 말도 많고 또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들에

게 아주 감동적인 장면 하나를 선사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인들을 초청하여 경영 천재라고 치켜세우면서 기업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총리님, 혹시 이들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과 창조한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국무총리 이낙연 전체 액수는 모릅니다만 이 중에서 롯데케미칼이 루이지애나에 준공했던 그 공장의 준공식은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지금 9개 대기업만 하더라도 약 10조 원에 일자리가 무려 5만 개입니다. 왜 이런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대규모 투자를 할까요?

화면 한번 보시지요.

‘삼성이 세계 일류 기업이 된 것은 하청기업들을 착취한 결과이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총리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기업들이 성공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있었을 것이고요 노동자들의 헌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의 창의와 도전 그리고 남다른 고뇌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업이 성공의 대가로 누구보다도 많은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우리가 복지를 누린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총리님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바로 여당의 대기업·대재벌관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업을 적대시하고 과도한 행정규제, 과도한 법인세 인상, 잦은 세무조사, 끊임없는 기업수사,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과 폭력 이러다 보니까 떠나간 기업은 돌아오지 않고 멀쩡히 있던 기업조차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혹시 요 근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페이스북 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페이스북은 못 봤습니다만 박 회장님은 늘 간간히 뵙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구구절절이 절절합니다. 정치가 경제를 좀 붙들어 줄 것은 붙들고 놓아줄 것은 놓아 달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총리님, 우리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

제가 더 망가지기 전에, 기업인이 더 위축되기 전에 보다 시장 친화적인, 자본 친화적인, 기업 친화적인 시장자본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전환이라기보다는요 분명한 것은 기업이 더 활발하게 그리고 문자 그대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면서 기업 활동을 해야 되고요. 물론 공정거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노동자의 권익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업들로서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동반으로서의 의무 그것은 기업들도 충분히 인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포항지진 관련 현장사진들입니다. 총리님도 다녀가셨고 여러 가지 약속도 하셨습니다. 포항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것이 산업부가 직접 용역을 의뢰한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총리님, 보고받으셨고 알고 계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 보고를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정부가 촉발한 지진으로 포항이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게 되면 지진의 직간접 피해가 3323억원, 여기에다가 지진도시 오명으로 인한 인구 유출,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관광객 감소 등 유무형의 피해를 합치게 되면 1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604일째 실내체육관에서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이재민이 92세대, 208명에 달합니다.

총리님, 국가가 일으킨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해당 장관이나 총리님 등 어느 누구 한 분 책임 있는 사과 한번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포항시민들이 분노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자리를 빌려서 포항시민들에게 정부를 대신해서 정중히 사과나 유감 표명 한번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담당 장관이 곧바로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요, 저 또한……

○박명재 의원 차관이 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포항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몹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나 여러 조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지금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배·보상 또 도시 재건, 책임 규명 등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이 바로 포항지진특별법의 제정입니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제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제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리님,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정청 회의 시에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우선안건으로 채택하여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그리고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갖다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약속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정청에서도 몇 차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이 빨리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포항시민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진 대책을 담았다는 추경 6조 7000억 중에서 포항지진 예산이 1.7%, 1113억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증액예산 그리고 용자·대출 이런 사업을 제외하게 되면 기껏 2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지진 대책 추경이라고 말하기에는 낮 뜨겁고 부끄럽습니다.

총리님, 제대로 된 지진 추경 그리고 관련 예산편성의 대폭적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총리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3500억 원 이미 지원했습니다만 홍해읍의 도시재생사업을 법을 일부러 개정해 가면서 특별도시재생사업으로 했습니다. 2257억이 들어갔는데 국고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민들께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받으시고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시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지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박명재 의원 법무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후보로 대통령께 제청하셨지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했습니다.

○박명재 의원 지금 인사청문회와 그 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보시면서 윤 후보자가 본인의 말 그대로 후보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법을 수호하는 검찰수장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해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설명으로 해소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후보자가 제가 제청했던 바와 같이 검찰총장으로서는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 갈 책임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박명재 의원 국민이 듣고 있는데요.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에서 거짓말하고 위증한 것이 드러나자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궁색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이번 개각에서 물러나시게 되면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저는 학교를…… 돌아가지 않습니다.

○박명재 의원 어쨌든 법과 정의를 가르치던 교수인데 그동안 몸담았던 우리나라 법무행정, 검찰 조직을 위해서 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말씀 해 주시고 이런 뜻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윤 후보자에 대한 제청……

○박명재 의원 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제청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까?

○박명재 의원 본인이 제청하셨기 때문에 불 윤 후보자가 지금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대통령께는 지명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그 말씀이요.

○법무부장관 박상기 그걸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명재 의원 전혀 없겠지요, 물론?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박명재 의원 지금 윤 후보자의 거짓 증언을 둘러싸고 소위 대윤이니 소윤이니, 거기에다 해당 변호사까지 가세해 가지고 벌이는 해명과 감싸기, 감추기와 의리가 눈물겹다 못해 국민들이 역겨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지요.

행정안전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인구 100만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그 목적과 대상 도시는 어디어디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지금 인구 기준으로 해서 100만 대도시 특례시, 단지 행정적 명칭만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인구 100만 대도시는 수원, 창원 그다음에 고양, 용인, 이 4개 도시입니다.

○**박명재 의원** 그렇지요? 그것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지금 현재 50만 이상과 100만 이상의 특례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행정적 명칭만 부여하고 도시에 어떤 자긍심 제고하기 위한……

○**박명재 의원** 행정적 명칭 부여와 동시에 기능이 부여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목적이 결국 지역 균형발전, 지방분권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통합창원시를 제외하게 되면 모두가 수도권 소재 도시들이에요. 그러면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도시로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가 있어요. 청주, 천안, 진주, 김해, 포항시, 이것도 함께 특례시로 지정해 가지고 말 그대로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 이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여러 의원님들이 다른 제안을 하고 계시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 입장에서 ‘어디까지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봐서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시를 다양하게 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크면 그에 맞게 옷이 맞아야 되는 것처럼 도시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혀야 됩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박명재 의원** 환경부장관 나오시지요.

장관님, 포항·광양·당진 제철소의 고로 정비 과정에서 이게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업체에 대해서 고발 또는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린 그런 단계에 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박명재 의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라든지 지자체 또 산업부와 어떤 대책회의를 했거나 또 정부 대책을 논의한 적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 저희 부가 주관해서 고로 문제를 진단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민관협의체를 6월 19일 날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미 세 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8월 말까지 오염물질의 종류나 수준 그다음에 해외 사례, 대책 방안, 제도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권고를 할 참이고 또 제도화할 참입니다.

○**박명재 의원** 지금 두 차례 시험측정 해 보셨지요? 결과 나왔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그 측정은 저희들이 그냥……

○**박명재 의원**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드론으로 간접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안 됐습니다.

○**박명재 의원** 드론으로, 어땀습니까? 보니까 유해성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양도 미미하다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환경부장관 조명래** 드론으로 두 차례 측정했을 때 그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것을 일반값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문제는 환경단체나 언론의 단순한 보도에 따라서 이렇게 면밀한 분석 없이 조업 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 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고로 한 기가 정지되어 받는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박명재 의원**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정지가 돼서 다시 가동하는 데 3개월이 걸리고 무려 8000억의 손실이, 1기를 새로 건설하게 되면 2년이 걸리고 4조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알고 계

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박명재 의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지금은 일단 지자체가, 시도가 이미 여러 제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또 의원님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그 처분을 좀 정지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은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계되는 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런 데 제출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할 참입니다.

○**박명재 의원** 지자체는 처분만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세계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룩셈부르크에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포철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가 앞으로 이들 업체와 함께 용광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 그리고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박명재 의원** 그러시고요.

장관님, 국민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됐나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천 적수 사태는 일종의 수계 전환에 따르는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정수장의 원수 공급하는 것을 바꾸어서 다른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을 충분히 지키지 않고 이를테면 한 10시간 정도 시간을 갖고……

○**박명재 의원** 직무태만, 직무유기가 있었구면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박명재 의원** 지금 인천과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전국적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이미 2015년에 통계를 가지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수도 개선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수조사한 것이 조

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참입니다.

○**박명재 의원** 이게 무시무시한 재난입니다. 먹는 수돗물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두지 말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됩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박명재 의원** 인천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환경부장관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좀 하세요.

○**환경부장관 조명래** 이번 인천 적수 사태를 저희들이 정리하고 난 뒤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부 입장도 밝힐 참이고 어떻게든 우리 국민들이……

○**박명재 의원** 사과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가지고 매년 10조씩 10년간 투자해서 전국의 수도권 등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자는 생명안전 인프라 뉴딜을 제안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박명재 의원** 이것은 생활 SOC 투자가 아니라 생명 SOC 투자입니다.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조명래** 예, 이미 부분적으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하도록 하세요.

들어가세요.

노동부장관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직업공무원 출신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명재 의원** 누구보다 노동 현장, 노동 정책을 잘 알고 또 오랫동안 지켜봤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박명재 의원** 지금 이 시기의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의 핵심 그리고 중점적 해결 과제가 어떤 것 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문제 그리고 장시간 근로 문제, 저임금 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동시간 단축, 저임금 해소, 안전한 일터 등 여러 가지 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지금 그 문제들 중에 핵심을 비켜나고 있는데 강성·귀족·권력 노조의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돌아오려면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노동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노동 정책은 한마디로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친노조, 친민노총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이인영 대표가 얘기하고……

또 다시 한번 화면 보시지요.

장관님도 잘 아시는 우리 민노총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주대환 씨의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박명재 의원 주 의장의 말처럼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어 경찰과 공무원, 기자, 기업 임원들 폭행을 일삼고 불법 파업, 고용 세습, 비리로 얼룩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그들만의 민노총을 개혁하여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한 노사관계,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노동부장관의 가장 큰 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책임 있는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재 의원 그래도 이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친노동 정부, 친민노총 정부니까 반드시 직을 걸고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걸고 이 노동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잠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울경하고 교통부장관이 총리실 주재로 김해 신공항 재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신공항 확장에 국한된 겁니까, 타 부지까지 다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번 검증기구는 문자 그대로 검증입니다. 부울경 검증단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제기한 문제는 옳은 것인가, 또 그분들이 지적한 기존 정책 결정 과정이나 그 내용은 올바랐던 것인가 이것을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박명재 의원 그런데 다섯 분이 합의한 사항인데 두 분의 시·도지사가 빠졌지 않습니까, 대구·경북?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명재 의원 그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 그 검증기구는 당연히 관련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그런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5개 시도 단체장이 합의하여 국책사업이 이미 결정된 것을 총선용, 민심용으로 영남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영남 사람들을 정치적 놀잇감으로 몰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과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청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것이 오해였다는 것이 입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총리님, 한 말씀만 드리면 옛말에 이르기를 보통 충신, 보통 재상은 자기를 임명해 준 임명권자를 위해서 일하고 보다 나은 충신, 양신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가 속한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보다 큰 충신, 재상은 국가와 역사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임기 동안 유념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명재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주승용 박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 해공 신익희 선생의 후예 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의 든든한 국회의원 임종성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연일 대한민국의 위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를 말하며 정작 경제 활력과 민생을 위한 추경에는 어깃장입니다. 안보와 외교의 위기를 말하며 비난만 있지 건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마치 위기를 주장해 위기를 조장하는 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위기가 있다면 우리 사회를 대립과 갈등, 분열로 이끄는 정치에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위기라면 하나가 돼 머리를 맞댈시다. 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치와 공존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친다고 하신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추경,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경미 의원에 이어서 의무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고교 무상교육, 즉 의무교육이 시작되는데 OECD 36개 국가 중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학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의원님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국가가 됐는데요. 지금 의무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학교까지는 저희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승용 부의장, 이주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임종성 의원 앞으로 무상교육이 의무교육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무교육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적인 강제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비는 연평균 약 160만 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가 많은데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이제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늦은 감이 있지요. 지난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였는데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원을 분담하는, 이게 어쨌든 국가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정책과제라서 재원 분담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고 이번에 올 2학기부터, 3학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재정 당국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합의를 해서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마련했는데, 저희가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 2학기는 3학년부터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2학년·3학년 그리고 21년도에 1·2·3학년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재정 당국과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학년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성 의원 그런데 국회 교육위에서 관련 법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 지금 최장 90일이 걸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교육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신속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이미 두세 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한국당 의원님을 대표해서 곽상도 의원님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 학년을 한꺼번에 시행하려면 한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 당국과 17개 시·도교육청이 거의 반반씩의 재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5% 재원 분담을 빼면 47.5%씩 양쪽이 분담을 하게 합의를 했는데요. 그게 이번 2학기는 교육청에서 추경 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학기 때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지금 예산 당국과 내년 예산을 조정해서 이미 마련하고 있는데 큰 규모의 예산이 바로 즉각적으로 편성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야당 위원님들도 여야 할 것 없이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위 여야 위원님들의 논의 과정에서 지혜로운 대안들이 찾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 교육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의무교육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총리께서 고교 의무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오 한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내년 예산이 구체적으로 심의되기 전에 두 개의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법률 개정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임종성 의원** 다음은 학교 신설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인 사람을 키우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학교 교육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습니다.

○**임종성 의원**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에 따라 학교 확보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임종성 의원** 그러나 우리 교육 현장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며 학교 통폐합이 진행 중이고 반대의 경우도 매한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난개발과 학생 수 급증으로 증축도 모자라서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까지 저렇게 교실을 짓고 계속 증

축 공사 중입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공평한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으니까?

이처럼 교육환경이 극과 극인 이유는 교육 당국이 학교 신설이든 통폐합이든 교육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터전 학교는 돈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동의합니다.

○**임종성 의원** 학생이 적은 학교일수록 유지하고 또 학교 수요가 많은 지역 역시 학급 수 등 일정 규모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학급 수를 줄인 소규모 학교를 통해 그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이러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소신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지금 급격하게 인구 구조·지형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학교 유형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소규모 학교로 인구 급감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또 소규모 학교를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의 특수한 여건이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미래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모형의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임종성 의원** 만약에 소규모 학교를 한다면 몇 학급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은 지역마다 여건의 차이가 있어서 학급 수는……

○**임종성 의원** 본 의원은 요즘 한 반에 한 25명이니까 4개 학급 정도면 100여 명 정도 되고 또 6개 반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 24개 학급 되겠지요? 거기에다 필요하다면 단설 유치원도 넣으면 되니까 복합화 시설을 해 가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아

무쪼록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은 교육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현장에서 찬반의 논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 부총리님 들어가시고요.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 사고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임종성 의원 초등학교 1학년인 두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들은 사고 차량이 세립이법 대상이 아니라며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렸고 또 청원 마감된 6월 현재 국민 21만 3025명이 동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2015년 시행된 세립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 차량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기준 경찰청에 신고 접수된 차량 대수는 약 10만 대입니다.

하지만 인천 축구클럽 차량 같은 각종 학원 차량과 13세 이상 18세 이하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은 세립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도에 큰 구멍이 생긴 꼴입니다.

이들 차량의 대부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 운송에 해당돼 불법입니다. 그 규모는 20만 대로 추정됩니다. 정부의 제도 미비로 불법이 양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총리님은 혹시 이런 실상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통학 차량 관리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찾겠습니다.

○임종성 의원 단속이나 규제가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들 차량들을 제도 내로 흡수해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통학 차량 전용 등록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관리를 좀 더 철저하고 체계

적으로 하기 위해서 등록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면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통학생만으로 수익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또는 기존 업종 영역에 침범해서 업종 간에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등등 미리 검토하고 준비해야 될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 통학 차량의 안전과 관련해서 단일 법률을 제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은 소속된 시설과 업무 내용에 따라서 경찰청 또 국토부, 복지부, 교육부, 문광부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산재되어 있는 어린이 통학·통원 차량에 대한 규정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조정실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관계부처 함께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도 준비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 다음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간략히 제안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1호이자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임종성 의원 그럼에도 정책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총리님 견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그렇게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통계를 보면 올해 6월에 사상 최고의 고용률 67.2%를 기록했고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8만 1000명의 취업자가 늘었습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몇 분이라도 실업의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신다면 그쪽에 정책의 배려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계를 책임지시고 우리 경제의 허리가 되는 삼십 대 남자들, 그분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

하시는데요 이쪽이 취약합니다. 제조업의 위기라고도 말하고 위축이라고도 말합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보통 삼사십 대 남자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97~98%까지 갑니다마는 현재는 91~92% 선입니다. 그 차이만큼의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8년 개띠가 가장 많이 태어난 그해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밀려나는, 정년이 되는 시기여서 아직 건강이 있으시고 활동적인데 직장을 잃게 되시는 그분들이 또 직장을 찾게 되기 때문에 많은 고용상의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은 있습니다만 좀 더 실효성 있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종성 의원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민간的高용 창출 여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가 은행인데 은행의 경우 덩치는 커졌지만 취업자 수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등 경제 기여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그 원인은 은행산업의 과점 체제에 있습니다. 특히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소위 빅 4는 기존 17개 은행의 합병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경쟁도도 낮아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총리님,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두 곳이 신규인가됐지만 시중은행 인가는 지난 1998년 평화은행 이후 20년간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은행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반 시중은행은 아니지만 지방은행이나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특화 은행을 신규 인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금융위원회하고 한번 연구를 하도록 제가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은행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고려 사항이 더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임종성 의원 현재 경기도와 충청도 또 강원도에는 지방은행이 없습니다. 지방은행은 소재기업의 자금 거래와 중개를 통해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화 은행 역시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임종성 의원 은행 외에도 자금 중개나 신용정보평가 시장처럼 독과점 체제인 곳은 과감히 참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학생들에 대한 금융·경제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을 퇴사한 중장년층을 학교에 배치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리님, 견해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선진국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돈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는지 우리나라가 돈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서도 그런 교육은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은행 퇴직자들이라든가 은행 경험자들을 학교에 배치한다고 했을 때 기존 교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을 겁니다. 해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 교육부나 또는 금융위원회하고 함께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의원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할 때 혼자 떠나면 외롭고 쓸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행을 하면서 좋은 동반자가 있으면 그 여행은 뜻깊고 또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동반자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동반자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국민한테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마는 부족함이 많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임종성 의원 총리님께서 국민한테 좋은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임종성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임종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바로 세우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똑같은 인식으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영** 임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 서초을 출신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서초을 출신 박성중 의원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박성중 의원**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 사업, 스스로 평가하기에 몇 점짜리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아직 평가하기는 좀 빠르겠습니다.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뿐이 아닙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 그리고 출연금을 강요받는 은행권들 그리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핀테크 업체들 그리고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 그리고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정부의 제로페이 사업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러움과 무능함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분기 제로페이 결제 금액은 총 13억 원, 하루 평균 1100만 원 수준입니다.

총리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들어와서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확인하고요. 조금 전에 남인순 의원님께서도 그 그래프를 보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13억 원은 서울시 목표금액 8조 5300억의 1%도 아니요, 0.1%도 아니요, 0.01%에 불과합니다. 사용실적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의원님의 그 통계가 아까 1분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1분기라면 3월까지 아닙니까? 그 후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그래도 0.04%뿐이 되지를 않습

니다, 다 그것까지 추산해도.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는 13억 원의 제로페이 결제를 위해서 98억 원의 홍보예산을 썼습니다. 8조 5300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홍보비만 65조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진의 원인은 홍보 부족이 아닙니다.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온 버스에 다 붙어 있습니다. 몰라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추경에 국채까지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제로페이 홍보예산 76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총리님, 세금 도둑질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요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께서 매출 8억까지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크나큰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결제가 빠르고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덜 알려져서 그러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다음부터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박성중 의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음 질문으로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로페이를 민간법인으로 만들면서 은행들에게 출연금을 10억 원씩 내놓으라고 협박공문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 조치라고 변명합니다.

총리님, 수수료 수익도 나지 않는 제로페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민간은행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공문의 방식이라든가 내용, 부적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박성중 의원** 실제로 일부 은행이 난색을 표하자 정부 관계자가 결정을 강요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총리님, 해당 기사에 무려 15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이 달렸는데 이 중 가장 많은 공감받은 댓글이 뭐지 혹시 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이런 식의 말들이 댓글이 많이 붙지요.

○**박성중 의원** ‘하는 짓이 딱 공산당 같은 정부네’ 공감만 4400개가 달렸습니다.

이처럼 제로페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식 좌파독재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2월에는 핀테크 업체도 제로페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총리님, 간편결제 서비스는 민간 영역입니까, 공공 영역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최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페이 등은 전부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만큼 대형 금융회사에서부터 신생 핀테크 업체들까지 시장에서 열띤 기술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 하나 더 물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성공한 외국 사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과문해서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제로페이의 매력 이 바로 사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소상공인들이 왜 그렇게 안 쓰겠습니까? 전무합니다.

알리페이, 총리님께서 잘 아는 중국의 알리페이도 전부 기업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페이 시스템을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관계 페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께서 모처럼 지적해주신 문제를 정부 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실효성도 없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제로페이 사업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오로지 대선후보를 키우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제로페이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입니다. 성과가 나지 않고 지지율이 담보 상태를 보이자 박원순 시장은 국민의 혈세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습니다.

총리님, 조정교부금 교부기준을 화면을 통해 한번 봐 주십시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해, 공공시설, 특별 재정수요에 한해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성중 의원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최근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 건수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방침을 발표했다가 큰 비난을 받자 취소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만.

○박성중 의원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특별교부금이 시장 개인 돈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 관계를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요. 그러나 교부금은 물론 개인 돈은 아닙니다.

○박성중 의원 지난 7년간 박원순 시장이 무분별한 특별교부금 장사에 연평균 3000억, 7년 동안 2조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구청에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교부기준도 없습니다. 우선순위도 없습니다. 절차도 무시합니다. 모든 게 시장 마음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정치권 인사들의 요구만 들어 준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처럼 시장 논리는 아예 무시하고 정치적 계산만 앞세운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로페이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은 계속 눈을 가리고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기본적으로 지자체들의 창의를 존중하자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마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 보고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JTBC가 방통위에 제출한 무상감자 신청 내용입니다. 요지는 자본금 5750억 원을 575억 원으로 10분의 1 감자하는 신청 내용입니다. JTBC 감자 신청은 방송계에서 전무후무한 사항입니다. 이는 종편, 종합편성 채널의 부실 경영에 대한 면죄부, 경영권 편법 승계 승인, 소액주주 583명에 대한 배임, 친정부 언론사의 비호 등 여러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제가 이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알겠습니다.

2011년 최초 종편 승인 조건 당시 최소 자본금이 3000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5000억 이상일 때는 배점이 100점이 부과됐습니다. 이렇게 자본금 기준을 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대략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어느 언론사나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 그리고 언론사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

지 요건, 최소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성중 의원 만약 500억 원이었다면 탈락됐지 않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랬겠지요, 가정입니다만.

○박성중 의원 이렇게 3000억 이상을 한 것은 안정적 경영으로 공적 책무를 다하라는 그런 의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JTBC는 부실 경영으로 자본금 다 까먹었습니다.

총리님, JTBC의 경영 부실에 대해서 최대주주인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님 그리고 등기이사인 손석희 대표, 어떤 책임을 진 적도 없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모르겠습니까?

경영 악화로 감자를 신청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마는 경남기업,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이런 회사들 대부분 최대주주가 자기 지분을 우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상선의 현정은 회장은 경영권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금융 당국이 승인한다면 경영 부실에 대한 경영진 책임 회피로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총리님, JTBC가 현 정부의 우호 언론이라 봐주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전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박성중 의원 처음 듣는 말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성중 의원 방송계 안팎에서는 JTBC가 감사 후에 연말쯤 오너 일가 또는 우호적 지분 약 500억 원을 투입해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고해서 경영권을 승계 해결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본 잠식된 회사가 대주주 지분 포기 없이 감사해서 결손금 다 털고 대주주 출자로 지분율 높이고 회사도 견실 회사로 포장해서 상장하는 신종 분식회계입니다. 경영권 편법 승계, 신종 분식회계 기법이 망라돼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연히 엄정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중 의원 또한 이번 불법 감자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방통위와 금융위가 승인해 준다면 직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피소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JTBC 간의 창구 역할을 손석희 대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최근 손석희 대표의 각종 추문에도 불구하고 홍 회장이 감쌀 수밖에 없다 이런 일부 여론들이 있습니다.

총리님, 손석희 사장이 김 모 기자 폭행 및 회유 사건에서 배임 미수 부분과 관련한 대응 논리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 화면에 뜨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중 의원 그대로 읽으면 ‘김 모 기자에게로 제공하기로 한 용역—2년간 2억 원 상당은 JTBC가 아닌 JTBC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에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석희 사장은 손석희 사장이 대표인 JTBC가 관여하지 않았고 중앙홀딩스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라는 논리입니다.

홍 회장 측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손 대표가 아직 정부의 메신저임과 동시에 정권과 연락 통로이고 또 이를 통해 홍 회장 일가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데 혹시 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글썄요, 무슨 정부의 누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분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가깝다면 저도 진작 만났어야 될 텐데 싶습니다.

○박성중 의원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가 되면 국민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라고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총리님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현재 우리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권력의 시녀로 살고 있다고, 어느 쪽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두 가지의 상반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는데 언론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라디오·신문·포털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간단히 제시를 하겠습니다.

방송이 좌편향 일색으로 흐른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KBS·MBC 양사 모두 사장·부사장·본부장 집행부는 전부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이고, 직원은 작가 PD 주요 보직까지 전부 출신입니다. 또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와 삼각체제를 이뤄서 손발이 아주 착착 잘 맞는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데서 공영방송이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조금 전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정도의 억측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박성중 의원 억측은 전혀……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혹시 주진우 김어준 김제동 김의성 김용민 이런 인물 이름 들어 봤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박성중 의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김제동 씨의 경우는 최근에 강연료가 비싸다고 해서 좀 시끄러웠던 분이고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 대표적인 좌편향·친정부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가짜뉴스, 포털의 깜깜이 뉴스 배열, 여러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댓글부대, 여론 조작의 공화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박성중 의원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보면 이 말이 생각납니다. 경제 파탄, 안보 파탄, 민생 파탄, 교육 파탄, 대한민국이 난파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정권은 세금 도둑질과 언론 장악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집권당 의원 여러분께서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이리저리 함부로 걷지 말라는 서산대사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주영 박성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갑 출신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밤바다가 아름다운 해양관광 중심 도시인 전남 여수 출신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3개월여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너무나도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들을 저희들은 무시해 왔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 단 29%입니다. 창피합니다. 이제라도 서로 협력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 이제 문 닫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열심히 일 좀 합시다. 민생 국회, 경제 국회를 만들어 갑시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금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하고 있지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권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한 데 대한 반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의원 거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돼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주 의원 총리께서 혹시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저희 친인척 중에는 없습니다.

○이용주 의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외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수십 년 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일제의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의 한 사람입니다.

총리님께서 아시다시피 강제징용 판결 몇 년도에 제기됐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이번 판결 말씀인가요?

○이용주 의원 최초의 소 제기가 된 것은 2005년 2월 달에 제기가 됐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주 의원 그 당시 이춘식, 김규수, 신천수, 여운택 등 4명이 원고로 청구했는데 이 중 지금 몇 명이 살아 계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두 분이신가요, 한 분이신가요?

○이용주 의원 95세인 이춘식 원고 한 분만이 살아 계시고 그동안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해 줬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 2005년에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해서 그분들께 일정한 지원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서는 다시 일본 가해 기업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겠다 해서 제소를 다시 하신 경우가 있고요. 그 재판 중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해당 재판이 1심, 2심에서는 원고가 졌었는데 2012년 5월에 드디어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환송 판결이 제기됐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 7월에 결국 서울고법에서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주 의원 그런데 2013년 11월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공관에서 소위 소인수회의라는 게 열렸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기소된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용주 의원 총리께서 알고 있는 소인수회의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부에 있는 분들과 대법원에 있는 분들 소인수가, 몇 분이 모여서 그 재판에 대해서 상의한 내용이라

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의원 결국 당시 있었던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바꾸기 위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회부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기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 당시 소인수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누구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청와대 또 외교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참여했던 것으로 압니다.

○이용주 의원 그리고 당시 법무부장관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기록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다. 당시 소인수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발언 내용을 본다면 이들은 국민인 강제징용 피해자들보다는 전범기업도 포함되어 있는 일본의 기업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기업을 위해서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의원 최근 일본으로부터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있자 항간에 박근혜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어야 했던 것이 아니냐, 그게 울발랐던 것 아니냐 이런 일부 주장들이 일부 정치권에서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논리는 소멸시효까지 기다리자는 것이 아니었는가 싶은데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의원 총리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태도가 아니겠지요.

지금 국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매운동, 거부운동 등으로 경제 보복에 맞서고 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주 의원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국민 사이에 일본에서는 혐한, 한국에서는 반일 이렇게 서로 나쁜 방향으로 상승해 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일본 지도자들이 그런 데 대한 저희들의 깊은 우려를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주 의원 일본의 이와 같은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정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 해석이 있었다는 것으로 압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황교안 대표께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마는 크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의원** 그랬기 때문에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조속히 개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께서 대통령께 다시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제안 하실 생각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바랍니다마는 또 단들이만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있으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께서 돕기는 하겠으나 일대일로 만나야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다시 한번 더 여야 5당의 대표 회담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주 의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정치권이 지금 국민이 보여 주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야 5당 대표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대일이면 어떻고 1대 5면 어떻습니까? 기왕에 한다면 제1야당의 체통을 살려서 제1야당이 소수야당, 제2야당 제3야당 제4야당 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제1야당의 체통을 찾고 통 큰 정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수 야당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 좁은 뻔뻔이 정치 그만두셨으면 합니다.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께서 조만간 개각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그것은 인사권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예.

장관께서 계실 때 유치원 사태 그리고 사립대

학 종합감사 등에 있어서 아주 역할을 잘해서 호평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고맙습니다.

○**이용주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식·돌봄 대란 사태 있었던 것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3일간의 파업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현장의 불편함은 있었습니다만 학교 교직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또 협력을 해 주셔서 굉장히 극도의 혼선, 혼란이나 말씀하셨던 대란은 다행히 아닌 게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번 파업의 불모이자 피해자로 볼 수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오히려 이번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 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우리 사회에서 노동삼권에 대한 존중,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 있고요. 또 교육공무직의 처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다. 이제는 불편해도 나와 함께 사는 누군가의 권리를 함께 지켜 주겠다는 그런 성숙한 국민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 시급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의원님께서서는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교 비정규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많은 분들이 업무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도교육청별로 굉장히 또 숫자나 조건이라는 것들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로 60세까지의 정년을 보장받은 무기계약직으로 한 90%까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비정규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으로 불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제로 새로운 임금체계라든가 처우에 대한 논의들을, 협의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다. 공정임금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공무직,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지 벌써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조속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교육공무직으로의 전환도 많이 높아졌고요. 물론 시·도교육감, 시·도교육청별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여전히 불충분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의 기본급과 또 각종 수당들이 많이 인상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함 또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와 관련된 임금이나 처우나 각종 단계적인, 이게 굉장히 큰 재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육공무직 노조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금인상 등을 다 수용하자면 6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다 시·도교육청별로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서로 공유하면서 좀 더 지혜롭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 합의들을 이루어 나갈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용주 의원 장관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옳은 방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조속히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 정치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무리 비정규직이라도 서울에서 일하면 100원을 받는데 대전이나 광주에 있다고 70원만 받는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공무직법을 통해 근로조건 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어떤 정치인의 블로그에 나온 글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

○이용주 의원 장관께서 2016년 12월에 블로그에 게시한 글입니다.

당시는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여당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들어가십시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달에 인천에서 있었던 한 모임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서울과 제주에

이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키우고 기초지자체 네 곳을 지역 관광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용주 의원 대통령께서 어느 지역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주 의원 총리님, 현재 정부가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이 안고 있는 오랜 문제점이 있습니다. 콘텐츠의 부족이라든가 볼거리가 충분치 않다든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역사의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접근 가능하게 돼 있지 않다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한국의 관광수지가 적자 상태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아주 고질적인 적자고요.

○이용주 의원 17년째 적자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흑자 규모보다도 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주 의원 문체부가 발표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를 보면 외국인들은 주로 식도락이나 자연 경관을 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거리나 교통편에 대한 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관광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 전남지사 역임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주 의원 전남이 식도락, 자연관광 면에서는 다른 시도보다 좀 뛰어난 편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경관도 좋고요.

○이용주 의원 그런데 전라남도도 이 방문 지역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접근성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국인 관광객은 꽤 많이 오시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용주 의원 불편한 교통 때문이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주 의원 그래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관광 편의를 위해서라도 전라선 고속화,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2012년입니까, 여수 해양엑스포를 위해서 1차 고속화사업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속 230km 가까운 그것이 됐는데 그것을 고속철로 바꿀 것인가, 아직은 타당성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수요가 늘어나고 한다면 다시 검토할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의원 자료 화면 봐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하루 평균 경부선 고속철로는 KTX 64회 SRT 40회 합해서 104회가 운행되고 있고요, 호남선은 KTX 30회 SRT 20회 총 50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라선은 KTX 15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편차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런데 호남선 KTX를 저도 지사 때부터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을 거다 해서 편수를 적게 잡았는데 일단 뚫리고 보니까 굉장히 이용객이 폭증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국면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철도 정책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의원 지난 1월 달에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 발표했는데 당시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포함시켰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주 의원 당시 B/C가 0.72 정도로 해서 매년 탈락했었는데 이번에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다.

전라선이 지금은 당장 B/C가 낮아서 경제성이 떨어져 보인다 하더라도 미래가치만을 본다면은 남부내륙철도에 못지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런 시기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의원 전라선 개통한 지 이미 100년이

넘었습니다. 5조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철도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이라 한다면 100년이 넘은 철도를 개량하는 데 그 정도 돈은 들여도 된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이용주 의원 총리님, 여수·순천사건 들어 보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잘 압니다.

○이용주 의원 역사적으로 총리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는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용주 의원 이 여순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 그리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을 하자 그런 취지로 특별법안 만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승용 의원님, 정인화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윤소하 의원님 모두 5명의 의원님께서 각각의 법안들을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과거사 정리법이라고 있는데요. 과거사 정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그동안의 진상규명이라든가, 더구나 명예회복이 전혀 진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의 방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 아니겠습니까?

○이용주 의원 그렇습니다. 여순사건이 발발한 그다음 해인 1949년에 전남도청의 공식적인 조사 발표에 따르면 여순사건 발생 지역의 인명 피해가 무려 1만 113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사 정리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표한 인명 피해는 불과 1230명이었습니다. 무려 1만 명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 피해 규모에 비해서 부족한 조사 인원, 짧은 활동 기간, 신청에 의존한 피해자 선정 등에 따른 한계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진실화해위원회가 임무를 다 완료하기도 전에 정권 교체에 따라서 활동이 중지된 것이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이용주 의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순사건 특별법을 추진하는데 정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협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경남에서 있었던 거창 사건, 충

북 노근리 사건, 전남 함평 사건 등 개별 사건들에 대한 특별법 형태도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정부도 협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개의원이라고 부릅니다. 국회의원이 되시겠습니까, 국개의원이 되시겠습니까? 길거리에서 개가 짖는다고 대꾸하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더 이상 국민들은 그 말에 대꾸조차 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희들을 국개의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반성을 해야 됩니다. 국개의원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시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 드릴 때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외 없는 국민 평등, 차별 없는 지역 평등,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주영 이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성북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면서 동시에 법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는 그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난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 국회를 폭력의 무대로 되돌려 댔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들끓었습니다.

다시는 국회에서 이런 사건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대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국회의원은 모두 109명이나 됩니다. 문희상 의장께서도 고발당하셨고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난달 28일 경찰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 의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자유한국당 의원 그 누구도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어느 의원은 국회의원 4명의 경찰 출석 요구 직후에 경찰청에 수사 진행상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다른 의원은 한 발 더 나가서 조사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조사대상자 명단과 향후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요구했습니다.

어느 한 분은 경찰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분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채이배 의원 감금에 가담했던 당사자입니다.

명백한 수사 외압입니다.

지난 3일 어떤 한 분은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 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도 말로 하면 참으로 얼척이 없습니다.

7월 8일 경찰은 여야 국회의원 18명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에 대한 출석 요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자유한국당에 의해 고발당했습니다. 저는 경찰에서 소환장이 송부되는 즉시 경찰에 출석해서 자유한국당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진술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소환에 응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7월 8일입니다. ‘국회 정상화 과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수사에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환하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수 없다는 협박입니까?

또 말씀하셨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국회의원 소환과 관련해서 ‘이 정권이 하는 것은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저부터 소환하십시오’, 모처럼 용기 있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치적 수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죄 없이 동원되어서 그 전선에 섰던 당직자들과 초·재선 의원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는 면죄부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도부이고 용단이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황교안 대표님과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서는 자진 출두해서 ‘이 모든 사태의 전말이 그리고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으니 자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는 다른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이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좀 잠깐 뵙고 싶은데요.

혹시 총리님, 법치를 실현하는 일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국회 정상화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잘 모르겠습니다. 법은 법대로 집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상식입니다.

○기동민 의원 법치를 강조하는 정당의 대표가 공권력의 법 집행을 압박과 불안, 공포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행정부에 몸담은 사람이 정치권의 얘기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몹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원론으로 말씀드리면 법을 만드는 곳이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고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의원 이 말씀 여쭙보기가 좀 부끄러운데요. 국회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공권력을 대놓고 무시하고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지금의 국회,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치의 불신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민 의원 정치권에서 이렇게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여파는 국민들에게

움아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공화당이 있습니다.

광장은 시민 모두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특정 정치세력의 점거 농성장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광장은 문자 그대로 시민들의 것이고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만나고 또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의원 지금 우리공화당이 농성하는 텐트가 아마 서울시 관할에도 있고 중구청 관할에도 있고 종로구청 관할에도 있는 모양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한 차례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안구 탈구 등 대단히 많은, 심한 부상을 당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공권력이 이렇게 예민한 문제 그리고 불법을 실질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정치 집단에 대해서 뭔가 유보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날 대집행이 이루어지던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신 국민들이 적지 않게 의아한 생각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집행은 지자체가 하고 경찰은 그냥 지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지만 눈앞에서 현행법, 현재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등 돌아서서 있는 경찰을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기동민 의원 모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질책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그런데요. 이런 사안까지 대통령께서 이렇게 뭔가 어떤 일정한 의견을 표현하시도록 방치해서 되겠느냐?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 유린, 질서 유린 그리고 또 뭔가 공권력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또 가스통까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중조정하겠다, 중재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 그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도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기동민 의원 분명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저는 정치권에서 촉발된 범무시, 법 유린 이런 행동들이 국민들로부터 정말

번지지 않고 잘 수습되어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이런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기동민 의원 수사단이 경찰의 수사 과정의 외압 의혹 그다음에 검찰 수사팀의 부실 수사 의혹 이런 부분들의 증거를 찾지 못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결론지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결론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현행 법체계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증거가 많이 멸실됐고, 그리고 물론 김 아무개 씨 본인이 비로소 구속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그겁니다. 과거의 수사기관의 잘못을 제대로 캐내지 못한 현재의 수사기관의 잘못, 이 두 가지의 허망함을 국민께 동시에 준 그런 결과가 됐다, 후자가 더욱더 아플 수도 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 모양이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이 얘기가 상당히 아픈 얘기인데요. 수사단 구성이 발표되자마자 어떤 여성 검사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되어서 참혹하다. 누구에게 수사를 맡기는지를 보면 수사를 맡긴 자의 의중이 엿보이고 수사 결과까지 다소간 예상할 수 있다’.

저는 대단히 무리한 접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촛불 정부의 검찰인데 이렇게 예단할 수 있을까, 이것은 경험의 오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단에 대해서, 예단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계셨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 검사님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랍니다마는 불행하게도 맞았습니다. 많은 무력감과 이 수사기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을 갖게 됐습니다.

○기동민 의원 얼마 전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어요. 윤중천 씨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2013년 검찰수사에서 김학의가 동영상의 주인공이고 김학의에게 고소 여성을 소개해 줬다고 밝혔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 얘기를 액면 그대로 다 믿을 건 못 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단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때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도 얘기를 했는데 왜 나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느냐’ 이런 항변이겠지요.

저는 어떤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한 사람을 거세하고 조직은 보호하는. 그래서 김학의라는 그런 거대한 상징은 제거하고 그 상징을 제거함으로써 조직은 또 보호받고, 이런 전형을 보여 준 것 아니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과했지만 사과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법적 조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만한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동민 의원 그 당시의 법무부장관이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셨는데요.

혹시 총리님은 인사 하실 때 아마 국무조정실장이 가장 가깝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의 평판과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즉 보고를 받거나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중요한 것은 대충은 알지요.

○기동민 의원 그러면 김학의 차관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속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되어 있는데 당시의 장관이 그런 문제를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추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동민 의원 이왕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보지요.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도졌던 사안들인데요.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당시에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었던 검찰총장후보자가 당시 국

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외압이 있었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안인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특별한 답변을 드릴 만
한 어떤 것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상의해 보
겠습니다.

○기동민 의원 그리고 또 2014년에 보면 세월호
참사 때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해경에 승객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서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
하려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외압을 행사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시다. 더 나아가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검찰 간부
들을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서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
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의원 1당의 대표세요. 그리고 더욱더
큰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요. 정치지도자인데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사장된 채 그대로 흘러간
다면, 정치적 공방으로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분의 명예에도 심대한 손상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적절한 조치를 통
해서 그분의 누명을 벗겨 드리든 아니면 세간에
흘러 다니는 의혹을 확인하든 하는 절차는 있어
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의원님의 뜻을 잘 알겠
습시다

○기동민 의원 뜻을 아시면 그다음에는……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로서 제가 어떻게 하겠
다는 정도의 답변을 드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
다.

○기동민 의원 저는 강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그리고 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
람들에게 법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로부터 어떤 예외도 있
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저도 그런 의식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 총리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문제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기동민 의원 도표를 한번 띄워 주실 텐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 중의 한 파트

입니다. 국민적 지지도 대단히 높고요, 거기에 따
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
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대형병원 쏠림현
상 이런 부분들이 가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어
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과다하다 이
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논란의 한복판 중에 국고보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는 국고보조가 높아야 되는데 그 당시의
적립금이 한 17조, 20조 쌓일 때도 15~16%는
갔거든요. 우리 정부 지금 13.4%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
고 있는 것입니다. 지원 액수는 사상 최고로 늘
었습니다마는 지원율에서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민 의원 착시가 있는데요.

지원 액수가 늘어 가는 것 역시 예산의 확대
과정 속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민 의원 고맙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기동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법을 만드는 곳부터 솔선해서 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고발했으면 최소한 조사에는 협조했
으면 좋겠습니다. 권력기관 역시 개혁합시다. 특
히 검찰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사회를 만들어 내는 데 우리 모두 앞장섰
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지도자들이 결단했으면 좋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주영 기동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갑 출신의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욱 의원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
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정태욱 의원**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느 기업 임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탄력근로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노동조합원들이 때를 지어 가지고 국회 담장을 허물고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취재기자를 무차별로 폭행합니다. 진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라면 이에 대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당사자들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은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민노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 지식인이나 이 정부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민노총이 저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법과 제도 여러 가지로 노동조합을 이중삼중으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에 대해서 하는 만큼 노동조합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와 공정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명백한 고용세습을 아예 단체협약서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채용비리들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또 대규모 사업장에서 거두어지는 조합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에 대한 회계투명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상입니다. 또 대규모 사업장의 노조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선거위탁단체로 지정하는 것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예,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은 노동조합도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경제사회의 주체로서 사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욱 의원** 그런데 지금 노동부는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장관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노동을 할 때는 사회적으로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그렇습니다.

○**정태욱 의원** 그런데 정부가 관리하는 조선회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과 2018년경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인데도 사무직은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3000명이나 구조조정됐습니다. 같은 회사의 생산직 직원들은 자연감소 외에는 구조조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하도급업체 직원들은 1만 5000명이나 구조조정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민노총이냐 아니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글썽요,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조조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때 노동조합과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대상자 선정할 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태욱 의원** 됐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파업할 권리도 주어지지만 개인의 재산권도 똑같이 헌법과 법률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파업이 일어나면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선진국에서 인정되는 대체근로나 파견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장관님, 노동조합 보호 외에 사용자의 쟁의수단 공정화라는 것에 대해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도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대항행위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쟁의기간 중에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것이고요, 또 직장폐쇄를 통해서 대응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태욱 의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모두 다 다른 편법으로 해 가지고 임금이 다 지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우리나라 노동정책이 정말 2000만 명 전체 근로자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원으로 구성된 민노총을 바라보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노동정책이 100만 명에 불과한 민노총이 아니라 2000만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계·노동권 보장, 일자리 확보에 맞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우선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이 민주노총만 바라보고 하는 정책이다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근로자와 같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취약한 근로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태욱 의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에 결국에는 다 따라가는 것을,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간에 3600만 명이 2조 2000억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고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굉장히 홍보를 하는데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태욱 의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지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문 케어 실시 이전에는 매년 3조 원의 흑자를 내던 건보재정이 문 케어 실시 이후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또 2026년이면 적립금이 전부 다 고갈됩니다. 문 케어 자체가 차베스의 포퓰리즘과 완전히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19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근목피로 겨우 가난을 면한 수준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 세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는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세대의 아들과 손자대가 과연 우리들 세대보다 더 잘살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국민들 중에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문 케어로 3600만 명이 2조 2000억의 돈을 아꼈다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문 케어에 진심으로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 아들·손자 세대 중에 그 누군가 3600만 명이 2조 2000억의 돈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는 날을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보험 재정을 좀 더 튼튼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태욱 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앞에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에 적립금 고갈 대책으로 국고보조금 증가, 보험요율 인상을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2조 2000억을 흠뻑릴 때 실제로 한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소개해 주십시오, 실제로 한 일. 그냥 검토하고 책상 위에서 회의한 것 말고.

오히려 비율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국고보조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지난 2년간에도 건강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매년 건강보험요율이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비율은 비록 낮아졌지만 국고 지원액 자체는 더 늘어났습니다.

○**정태욱 의원** 제가 지적하는 바는 국민이 좋아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느냐의 여부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할 때도 지속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이 균형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5년 뒤에도 지불준비금이 10조 원 이상, 그리고 그 뒤에도 상시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짜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1966년에 중국에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나서 20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당시 권력자인 모택동이 개인 인기가 떨어지니까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한 데서 촉발되었다고 보통 평가받습니다.

국가나 권력자가 해서는 안 될 나쁜 일 중의 하나가 국민 간에 갈등과 반목을 일으켜 정치적이득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태욱 의원** 지난 6월 20일 날 국토부장관은 부산·울산·경남 단체장과 함께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재검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총리께서 올해 3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언제나 시나리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것

이나?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부산·울산·경남이 요구하는 대로 김해 신공항이 안전성, 확장성, 소음에 문제가 있다고 재검증 결론을 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은 다음 총선 공약으로 새로운 공항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할 겁니다.

그야말로 TK와 PK를 갈라치기 하고 부산·경남 지역 총선 민심이 야당으로 향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시나리오라고 시중에서 이야기합니다. 총리님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봐 주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면 그대로 진행이 되었겠습니다마는 부울경에서 기존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승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이 진척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그때 여러 차례 국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울경 검증단과 국토부 사이에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총리실이라도 나서서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증은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욱 의원 그 문제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영남권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진 한번 봐 주십시오. 삭발하는 사람, 할복하겠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려 아우성입니다. 무려 10년간 서로 죽기 살기로 다투었습니다. 영남이라는 동질적인 지역이 두 패로 확 갈려서 끝없이 갈등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와중에 어렵게 어렵게 2015년에 5개 단체장이 외국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입지를 결정하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습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에서도 엄청나게 실망하고 허탈해했습니다. 그러나 10년간의 영남 지역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해서 다시 10년간의 국토 분열과 주민들 간의 갈등, 1300만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을 다시 수면 위로 띄워 올린 것입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점점 차원이라고 아까 대답하셨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민원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결정 과정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정태욱 의원 총리님, 그러면 대책사업 중에 어느 일방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다 재검검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입지를 두고 경기 북부 주민들이 지금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재검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번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세 곳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정태욱 의원 단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둘의 차이는 하나는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집권 여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일반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판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까.

김해 신공항의 재검증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태욱 의원 2015년에 용역을 한 ADPi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은 80개 국, 500개의 공항을 설계하고 시공·감리한 전문성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20억에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재검증은 그보다도 훨씬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이 드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번에 재검증을 위해서 어느 전문기관에 맡길 것이며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얼마의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밝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객관성·공정성·과학성을 갖춘 만한 그런 검증기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증기구가 검토해서 활동기한이 그다음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를 정해 놓고 이것만 검증해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욱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연구기관 한두 군데 해서 몇 명 회의하고 결론 낼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총리께서는 선거용이 아니라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검증한다 하면, 총리님

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면 제가 두 가지를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국민 앞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정태욱 의원 첫 번째는 총선용이 아니면 이 점검을 시작하고 결론 내는 것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어 주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지난번의 용역도 어렵게 결정된 것이 5개 시도가 합의해서 추진했다면 이번의 재검증도 5개 시도의 의견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5개 시도가 합의하는 기관, 합의하는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총리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우선은 시기는 이런 갈등 상황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증 결과가 나온다면 내놔야 되겠지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검증기구의 구성은 5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저 사람의 편향성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은 배제해야 되겠지요.

○정태욱 의원 지금 총리께서는 시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 하지 않고 겨우 제척하고 의견수렴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이 꿈이 크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공정하게 하고 진정으로 이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결정 내리셨다면 총선 이후로 미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의 의견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정태욱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정태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 영남권 신공항은 1300만 영남 주민들을 갈등에 밀어넣느냐, 안 넣느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선거에 이용되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이 문제가 추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의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주영 정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윤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

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제윤경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경기도 시흥에서 그리고 최근 7월 2일 충남 천안에서 일가족 자살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미수까지 포함했을 때 일곱 번째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렇게 끔찍한 비극의 뒤에는 언제나 빛이 숨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고 포용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혀 온 채권시장의 야만성이 다 해소되지 않아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먼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 관련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등등의 성과라기보다는 그런 결과는 있었습니다.

○제윤경 의원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채무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혀 온 장기연체 채권들입니다. 사실 안 값은 것이 아니고요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온갖 법 조치, 이런 채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자산 규모가 감당할 수 없어서 연체되어 왔던 장기 채권입니다. 이 중 공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을 소각을 했는데 무려 300만 명의 빚, 45조 원을 소각을 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18조 원 규모의 기금으로 322만 명의 신용유자의들의 신용회복을 돕겠다라고 했던 공약을 우리 문재인 정부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실현했습니다.

또한 적절한 규제 도입 그리고 규제 개선으로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총량도 점차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난 정부는 LTV, DTI 등 규제를 지나치게 많이 풀었지요. 그로 인해서 또 빚내서 집 사라라는 식의 정책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계부채 주도정책을 통한 성장을 추진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대비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비참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례를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95년도에 523만 원 대출을 받

있고 외환위기부터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사회적·경제적 한파로 인한 연체였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 채권이 대부업체로 3% 수준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만 원, 단돈 15만 원에 이 채권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19년 동안 추심은 계속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총 2000만 원이 넘는 돈에 대해서 연체가자까지 포함해서 추심을 당했습니다.

대부업체가 단돈 15만 원에 산 채권의 권리가 20년 가까이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둔갑해서 채무자들을 괴롭힌다, 이런 권리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 문제는 의원님의 도움도 있었고 제가 지사 시절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또 우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도움을 받아서 일정한 기준에 속하는 채권을 소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일정한 성과, 제가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려서 실행이 되었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까지 악덕 대부업체들을 전전하면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래서 빚에 몰리게 되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윤경 의원** 더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드리면요 이것은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상담했던 사례인데 60만 원의 카드빚을 갚지 못한 연체자의 사연입니다.

물론 60만 원도 못 갚은 건 안 갚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채무자는 사실은 12년간 300만 원이 넘는 돈을 갚았습니다. 다만 기한 내 갚지 못해서 갚는 속도보다 이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다 갚지 못한 것이지요.

이러한 종류의 채권은 시장에서 한 1%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결국은 한 6000원가량에 사온 채권인데요 이게 굉장히 야만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뭐냐 하면 6000원짜리 채권으로 이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신청을 했고요 재산명시신청이라는 법 조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무자가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유치장에 감치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지요.

6000원으로 사람을 유치장에 가둘 수 있다, 이

것은 너무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적인 위상이나 권한에서 너무 심한 불균형이 있고요. 특히나 채권자가 점점 돌아가면서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해 가면서 이자를 불리고 또 악덕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고 그래서 죽음으로 내몰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윤경 의원** 빚을 소각하고 탕감해 준다고 그러면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원래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 시장에서 헐값에 팔리고 이렇게 할인된 가격에 채권을 매입한 채권자가 채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이 저는 야만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이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압류도 할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산명시 요구를 통해서 감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보여 드린 사례가 일부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다음 표를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재산명시신청 건수가 2016년만 해도 9만 7000건이고 그중 2만 7000여 명이 지금 유치장에 갇히는, 빚으로 인해서 유치장에 갇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과도한 추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객관적으로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인데도 그것이 채권시장을 전전하면서 점점 소멸시효는 끝도 없이 늘어나고 이자가 불어나고 몇천 원짜리가 몇백만 원으로 불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끊어야 됩니다.

제가 오히려 의원님께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인생법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후세들이 제윤경 의원 덕분에 우리가 악덕·악성 채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부가 돕겠습니다.

(이주영 부의장, 문희상 의장과 사회교대)

○**제윤경 의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도 보호돼야 하지만 거의 90% 이상의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채권자의 권리를 100% 다 보전해주는 것은 사실상 무언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채권의 권리가 양도되는 사이 채무자의 권리는 최소한의 인권마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렌이 채무자에 대해서 정치적 투명인간으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투명인간이 사회에 재기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설한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감사합니다.

○제윤경 의원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채권자의 여러 과도한 권리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권리행사가 아주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바로 전자소송이라는 든든한 무기가 전제돼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전자소송이 몇 년도에 도입됐는지 그리고 한 해에 몇 건 정도의 전자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글썽요 정확한 건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소송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악용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윤경 의원 표를 보시면요 작년에만 325만 건의 전자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는데 그중의 절반이 사실은 독촉입니다. 빚 독촉을 위한 지급명령으로 활용됐다……

말씀하신 대로 전자소송은 그것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아닙니다. 2011년 전자소송이 가능해진 그 당시에 법원에서 낸 보도 자료를 보면요 ‘국민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진하고 그러한 사법 서비스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자독촉이 전자소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애초에 이 도입 취지하고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상기 도입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전자소송제도의 대출채권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기는 한데 전자소송제도의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허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효 완성된 대출채권 대부업체 같은 데서 양수해 가지고 변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거나 또 시효기간 등의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방법들, 또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해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의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는 채무자 보호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이것은 법률로도 아니고요 사실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혹은 부실채권에 있어서 매각 자체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각된 이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이것은 그 정부의 채무자 보호,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지 이것을 불가능한 것이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런 식의 채권들이 거래되고 또 거래가 일곱 차례, 여덟 차례 반복되면서…… 저는 사실은 사망하신 분의 채권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야만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호주 관계자도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에 발의를 했고 그 당시에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때 법원행정처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 크게 이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장관님, 이 법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봐 주시고 법원행정처의 태도와 입장의 변화, 개혁의 의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금융시장, 포용적인 금융시장 그리고 포용적인 경제 이것을 완성하는 데 장관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예, 사실 전자소송을 통한 채권 연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소액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문제, 그래서 틀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법원 등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의원 사실 이것은 오늘 경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에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 이것을 부실채권으로 정리하고 그에 따라서 페널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와 타협하고 채무재조정을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인 동기가 충분히 제도적으로 전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금융사에서부터 3개월 연체되면 금방 회계장부에서 빼 버리고, 팔아 버리고 그렇게 해서 건전성 지표도 그냥 인위적으로 숫자만 맞추는 방식, 그래서 사실상 부실이 잠재되고 지금 현재는 부실채권 시장에 대해서 통계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여러 가지 금융 환경에 있어서의 위험요인까지 생각한다면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서 제도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 알겠습니다.

○**제윤경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제윤경 의원**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에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절차 간소화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윤경 의원** 예,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초단체별로 민영 방식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의원** 사실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단 개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그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산업단지만 조성한다고 해서 갑자기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산단 조성에 따른 투자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신중한 투자가 사실은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산단 개발 사업은 사실상 민간 사업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 시행사들이 산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본 조달을 부동산 PF 대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부동산 PF도 아니고요 지방정부가 보증을 선 PF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요. 표를 보시면 20군데지요? 이게 여러 금융회사가 아니고요 딱 한 군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융회사입니다. 20곳의 산단 조성을 위해서 한 군데 금융사에서 2조 5000억이나 지방정부가 보증을 서서 자본을 조달했다. 그중에 벌써 손실이 확정된 것만 2000억입니다. 7군데가 사실은 손실이 나서 지방정부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사실은 앞으로 5개 정도 더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들여다보시고요. 무분별한 시행사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실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본 조달 방식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손실은 중앙정부의 재정 손실로 당연히 귀결되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관련 제도 개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그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문희상** 제윤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기적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그 기적의 원천은 바로 교육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고 꿈이었던 대한민국 교육이 문 정권 3년 만에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정치화, 이념화의 굴레에 몰아넣고 국가가 제공하는 획일화된 교육만 받으라고 강제합니다. 하향 평준화를 필두로 교육사회주의로 치

닫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사회주의화시키면 그다음 수순은 불 보듯 뻔합니다. 곧바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로의 대전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를 망치더니 전교조 주도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좌파 교육감들이 교육을 장악하고 교육부는 이를 방조·묵인하고 있습니다. 법외노조 전교조만 살판난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17개 시·도교육감 14명이 친전교조 좌파 교육감들입니다. 10명은 아예 전교조 출신입니다. 능력 있는 교육자를 교장으로 발탁하라고 있는 교장공모제는 전교조 출신들의 초고속 승진 창구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과거 좌파 운동권들이 그랬듯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신념으로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전 정권의 역사 교과서를 없애더니 이제는 불법까지 불사하면서 교과서를 갈아 치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교육감들은 자신들의 이념 성과를 위한 혁신학교는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그 반면에 정부에 돈 한 푼 손 벌리지 않고 자율, 경쟁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을 지향해 오던 자사고를 법령도 무시해 가면서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 사학의 자율성, 자유, 창의가 들어설 여지는 없어졌습니다.

부정과 부패는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패 척결의 깃발을 앞세우면서 아무런 근본적·구조적 대책도 없이 사학 말살이라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아무것도 없던 불모지에서 교육 기적을 이뤄 낸 사학들을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의 무대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를 조정해야 할 교육부가 전시작전사령부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따르지 않으면 벌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 나라의 교육 기적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금지와 자부심이 없는 교육, 미래가 보이지 않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저물어 가셔야 되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총리께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 정부에서는 필수 확인 코스가 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남북이 다른 나라, 한반도 바깥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6·25는 있었습니다.

○전희경 의원 남과 북이 엄연히 분단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서 있는데 6·25 전쟁을 부인하시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 한민족이 한반도 바깥을 침략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6·25는 그다음에 나오는……

○전희경 의원 그러면 북한은 지금 한반도 밖을 침략할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핵을 포기 안 하니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의도까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한민족이 평화를 사랑했는데 그러나 우리 남과 북 사이에는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있었지요.

○전희경 의원 총리께서 대통령께 그 얘기를 꼭 전하시고 그 인식을 가지라고 좀 하십시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서해상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문자 그대로 폭침이고, 북한의 도발이었지요.

○전희경 의원 총리께서는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방부장관으로 제청을 하셨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에 관해서는 그에게 본인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희경 의원 납득이 되시던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저는 납득이 됐습니다.

○전희경 의원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던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는 납득이 됐습니다.

○전희경 의원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범죄가 맞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북한의 남침이었지요.

○전희경 의원 4초가 안 걸려서 다행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뭐가요?

○전희경 의원 4초가 안 걸려서 다행입니다. 국방부장관은 4초나 생각하시던데요.

이런 정권에서, 대통령부터 나서서 6·25 전쟁을 부인하고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사소한 충돌로 인식하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통령은 6·25 전쟁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전희경 의원 김원봉은요?
 ○국무총리 이낙연 누구요?
 ○전희경 의원 김원봉이요.
 안 들리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전희경 의원 김원봉!
 ○국무총리 이낙연 김원봉이요. 내가 설명드릴까요?
 ○전희경 의원 예.
 ○국무총리 이낙연 2015년이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사편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광복군이 국군의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군에 조선의용대가 편입이 돼서 전력이 대폭 증강됐고 그때부터 조선 진공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조선의용대의 지도자가 김원봉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말했던 것뿐입니다.
 ○전희경 의원 조선의용대의 본진은 중국 공산당으로 편입이 됐고, 그 잔류세력이 광복군에 편입이 됐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충청에 광복군 총사령부가 이번에 완전 복원됐습니다마는 거기의 사료들을 보시면……
 ○전희경 의원 광복군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와 장준하 등의 김원봉에 대한 평가를 총리께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제가 의원님만이야 하겠습니까마는 저도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희경 의원 다음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희경 의원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기 썬진 그대로입니다.
 ○전희경 의원 보훈가족한테 이런 것 그렇게 버젓이 내놓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이 넘어가십니까, 그분들이?
 ○국무총리 이낙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심함이 좀 부족했다,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배려도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심함에서 아쉬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희경 의원 세심함이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지요. 비정함입니다. 비정함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의원님만은 못하지만 저도 국어 꽤나 했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경 의원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내 소란)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희경 의원 전교조의 법적 상태는 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범외노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전희경 의원 아까 보니까 법 앞에 무관용, 법치, 법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하시던데요. 전교조의 정식 명칭이 뭐지요,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던가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전희경 의원 안 이상합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하여튼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거기서 이상한 점을 모르시겠어요?
 ○국무총리 이낙연 어떤 것이 이상하신지요?
 ○전희경 의원 노조법에 보면 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바로 그래……
 ○전희경 의원 이 자체로 법 위반이거든요?
 ○국무총리 이낙연 바로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있는 것이지요.
 ○전희경 의원 명칭이 아니고요.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서 처벌받는 다른 지역이 많아요. 유독 전교조는 이렇게 이름부터가 불법 상태인데 만나고 악수하고 교육 파트너라 그러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대법원에서 판정이 나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판결 전의 법적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중요……
 ○전희경 의원 현행법으로 불법인 것은 이 정권에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잠깐만요.
 중요하지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희경 의원 불법 상태 해소하고 기다리셔야

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대법원에 그것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다른 국민들한테도 그러시나요? 민노총과 전교조만 왜 그렇게 특혜를 받아야 하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희경 의원 저는 특혜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원칙, 법 위에 군림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우리 국회도 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경 의원 국회 타가기 전에 전교조 불법 상태 좀 해소하세요.

다음입니다.

전교조에 노조전임자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는 없게 돼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다시 한번만……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는 둘 수 없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희경 의원 그런데 2019년 현재 51명의 전교조 출신이 노조전임자를 하고 있고요 교육감들이 이것을 위한 불법 휴직을 허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을 시정하도록 교육청이 몇 번이나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그러면 이 정권은 말하다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국무총리 이낙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노력이 최선이 아니지요. 국가의 법을 위반한 상태에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 교육……

○전희경 의원 가부만 있을 뿐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교육청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언제까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 그 관계가 바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요 그 이전에라도 빨리 그런……

○전희경 의원 현재의 불법을 방치하는……

○국무총리 이낙연 잠깐만요.

○전희경 의원 답변을 계속하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말씀을 마구 끊으시는데요. 팬찮습니다.

○전희경 의원 전교조에 교육청이 사무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약 40억 정도를 각급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요. 전교조 조합비 압류해서라도 시민의 재원을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것이 법에 맞게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전희경 의원 현재의 불법을 모두 용인한다, 노력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대한민국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물렁해졌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용인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희경 의원 지금 모든 답변은 용인이라는 답변이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드린 답변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희경 의원 교장공모제를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교장공모제, 예.

○전희경 의원 취지가 뭘까요,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국무총리 이낙연 새로운 기풍이라든가 새로운 철학이 교육 현장에 부분적으로라도 들어오길 바랐던 것이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그런데요 전교조만 다 하네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구체적인 통계는 교육부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외우고 있는……

○전희경 의원 제가 보여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한번.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희경 의원 100%인 데도 다섯 군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100%인 데가 더 늘었습니다.

공정합니까? 10% 전교조가 교장공모제 싹쓸이, 공정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100%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들리는데요, 조금 전의 표를 보면 숫자는 소수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작은 티오를 다 차지하거든요. 더 나쁘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교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숫자하고는 다른 걸로 보입니다.

○전희경 의원 그 지역에 배정된 거요. 다 차지한다니까요.

○국무총리 이낙연 저의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
다.

○전희경 의원 교과서 불법 수정 기사 보셨습니
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희경 의원 검찰 공소장은요?

○국무총리 이낙연 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
다.

○전희경 의원 담당 과장, 연구사가 이렇게 도
둑 날인까지 해 가면서, 민원 조작까지 해 가면서
단독으로 했다? 오랜 정치 경험 갖고 계신 총
리께서 믿어지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 문제는 이미 조사가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요 법에 따라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그런데 여기 관여된 기소된 공무
원들이 한 사람은 태국 한국교육원장으로 영전해
서 갔고요, 한 사람은 충남 예산교육지원청 장학
사로 영전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 공정하게 수
사 제대로 받으려면 불러들여야지요?

저기 보세요, 제가 띄워 드린 것. ‘신원상 국외
파견에 지장이 있거나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파견 부적절’, 왜
안 불러들입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 거
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법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전희경 의원 법대로 안 되고 있어요. 교육부
에 시정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국무총리 이낙연 그러니까요 제가 정확한 사
실관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말
씀드리는 것입니다.

○전희경 의원 총리께서 원래 일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마음이 뜨셔서 지금 이렇게 하시
는 겁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거대한 역사 장악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
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
교육과정평가원, 모두 한결같이 우리나라 대
통령,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의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북 문제, 북의 도발, 어떻게 생
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제가 개개인의 생각까지는
깊게 알지를 못합니다.

○전희경 의원 발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
랍니다.

자사고 문제 좀 말씀드릴게요.

자사고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재지정 취소된다
고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것은 아직 최종 절차가 아
니고요,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
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총리는 지난 4월 11일 현재의 자
사고 관련 판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예, ‘우선선발권은 옳지 않
다. 중복지원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였지요?

○전희경 의원 동시지원을 금지한 것은 전원일
치 위헌이고요, ‘일반고랑 동시 못 한다’ 전원일
치 위헌, 우선선발권도 다섯 분이 위헌이고 네
분만 합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으로 시행
령을 만든 거예요.

○국무총리 이낙연 현재의 결정은 학생의 선택
권이라든가 공정한 권한 이것을 존중한 훌륭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그 훌륭한 판단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 시행령이 악의적이지요?

○국무총리 이낙연 그래서 현재의 판단을 받은
것이겠지요.

○전희경 의원 그렇습니다.

총리, 상산고를 잘 아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잘은 모르지만 어떤 학교인
지는 짐작합니다.

○전희경 의원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최종 절차가 아니고요. 청문과 동의 과정에서 법
령의 위배는 없었는지 등을 엄밀하게 볼 것입니
다.

○전희경 의원 있으면 부동의하라고 하시겠습니
까, 교육부에?

○국무총리 이낙연 법령대로 하리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점으로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거둬 말씀드리지만 법령의 준수 여부를 엄정하게 볼 것입니다.

○전희경 의원 아니면 부동의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법령을 위배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의원 그 말씀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이 정권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 남의 자식은 사다리 걷어차입니다.

표를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18개 장관 중에 열두 분이 이렇습니다. 위선 정권에 위선 교육정책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이 중에는 오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사고 지정되기 전에 이 학교를 다녔던 것도 자사고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두어 군데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자사고 지정 이전에 학교 다닌 사람도 자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빼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다 아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비웃지 마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학년, 나이를 보면 알게 됩니다.

○전희경 의원 제가 교육감 것도 보여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위선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오류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희경 의원 나중에 체크해서 주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아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경 의원 주장하시잖아요. 저는 오류 못 봤는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총리가 말씀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전희경 의원 말씀하세요.

○국무총리 이낙연 자료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전희경 의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예.

○전희경 의원 총체적으로 총리는 이 정권 교육 정책에 몇 점이나 주고 싶으십니까?

○국무총리 이낙연 그렇게 점수를 매길 만큼 깊

게 따져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희경 의원 총리신데요?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라고 다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희경 의원 교육부에만 맡겨 놓고 총리가 하나도 안 챙기셔서 대한민국 교육이 이 지경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이낙연 저를 과대평가하셨습니다.

○전희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셨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말살하려는 의도하에 그리고 하향 평준화의 의도하에 대한민국 교육을 끌고 가려는 아집만 있을 뿐입니다.

그 와중에 내 자식은 대한민국 교육에 묶여 두기 싫어서 자사고, 특목고, 외고, 유학 바로바로 챙겨서 보내고 위장전입까지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라는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나마 교육이 희망인 사람들입니다. 교육이 유일한 삶의 낙인 부모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불러오는 교육 붕괴가 우리 사회의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빵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희상 전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3일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정부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 의원(272인)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석호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강경대 이수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결 이재종
 고용진 강광대 강상도 강권미 권미혁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권관영 권태섭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기동민 김경진 김관영 김광림 김태섭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도읍 김해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기 김병기 김상훈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수 김성수 김성태 김순례 김영춘 김재원 김종민
 김상희 김석기 김성찬 김성태 김순례 김영춘 김재원 김종민 김진태
 김성식 김성원 김세연 김영진 김재경 김정훈 김진태 김학용 김현권
 金成泰 김성환 김영우 김재경 김정훈 김진태 김학용 김현권 노웅래
 김승희 김영우 김용태 김재경 김정훈 김진태 김학용 김현권 노웅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훈 김진태 김학용 김현권 노웅래
 김정우 김정재 김중회 김태흠 김현권 노웅래 민병두 박덕흠
 김종석 김철민 김해영 김남인 남경욱 민병두 박덕흠 박병석
 김진표 김한표 김남인 남경욱 민병두 박덕흠 박병석 박완수
 김한정 나경원 남인순 남경욱 민병두 박덕흠 박병석 박완수
 맹성규 문희상 민경욱 민병두 박덕흠 박병석 박완수 박재호
 박경미 박광온 박대출 박덕흠 박병석 박완수 박재호 박주현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완수 박재호 박주현 백승주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완수 박재호 박주현 백승주 서삼석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주현 박주현 백승주 서삼석 설훈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변재일 서삼석 설훈 송갑석 송옥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형수 설훈 송갑석 송옥주 신보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손혜원 송갑석 송옥주 신보라 심기준
 성일종 소병훈 손혜원 송영길 송옥주 신보라 심기준 안규백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신보라 심기준 안규백 어기구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심기준 안규백 어기구 열동열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어기구 열동열 우상호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열동열 우상호 유기준 유승민
 엄용수 여상규 여영국 엄동열 우상호 유기준 유승민 유재중
 오신환 오영훈 위성곤 유성엽 유승민 유재중 윤소하 윤종필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재중 윤소하 윤종필 윤후덕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소하 윤종필 윤후덕 이명수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명수 이석현 이용득
 윤영석 윤일규 윤재옥 윤호중 윤명수 이석현 이용득 이장우
 윤준호 윤한홍 윤이만 이명수 이석현 이용득 이철희
 이상돈 이양수 이언주 이은권 장병완 장석춘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희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이혜훈
 이후삼 이훈 이종성 장병완 장석춘
 임재훈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성호
 정동영 정병국 정우택 정유섭
 정양석 정용기 정종섭 정춘숙
 정인화 정점식 정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진영 채이배
 최경환(평) 최고일 최도자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최재성 추경호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개의 시 재석 의원(99인)

곽상도 권은희 김광림 김도읍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金成泰
 김영호 김재경 김재원 김정우
 김정훈 김중회 김중훈 김학용
 김한표 김해영 김현아 남인순
 맹성규 문희상 민경욱 박경미
 박병석 박선숙 박완수 박용진
 박재호 박정민 박찬대 서영교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갑석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안규백
 어기구 열동열 우상호 유기준
 유승민 유재중 윤소하 윤종필
 윤후덕 이명수 이석현 이용득
 이장우 이철희 이학재 이혜훈
 이후삼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 전해철

전희경 정갑윤 조원진 조훈현
주광덕 진선미 진영 최교일
최운열 최재성 추경호 표창원
함진규 홍영표 홍익표

○산회 시 재석 의원(85인)

강길부 강석진 광대훈 광상도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도읍 김민기 김병욱 김상훈
김상희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金成泰 김영우 김영진 김재원
김정우 김종석 김종회 김한표
나경원 노웅래 맹성규 문희상
박경미 박병석 박완수 박정
박주현 박찬대 박홍근 백승주
송갑석 송옥주 심상정 안호영
엄용수 염동열 위성곤 유동수
유민봉 유은혜 유재중 윤상직
윤종필 윤준호 윤후덕 이규희
이동섭 이만희 이상돈 이용주
이원욱 이인영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이학영 이학재
이현승 이혜훈 임이자 임종성
전희경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유섭 정인화 정종섭 정태욱
조응천 진선미 진영 최경환(평)
최도자 최연혜 추경호 한정애
함진규

○출장 의원(2인)

김무성 손금주

○청가 의원(19인)

김경협 김병관 김영주 김정호
김중로 김태년 김현미 도종환
문진국 민홍철 박영선 송언석
원혜영 윤영일 이개호 정운천
정재호 정진석 천정배

○국회 참석자

입법차장 한공식
의사국장 권영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무총리 이낙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법무부장관 박상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환경부장관 조명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출석 정부위원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보고사항】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방	최경환	박맹우	자유한국당	2019. 7. 11.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박맹우	최경환		

○의안 제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10. 임이자·장석춘·이명수·김기선·
조훈현·김순례·김승희·윤재욱·윤종필·
추경호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0. 김경진·천정배·김삼화·김동철·
유동수·김성수·김종회·어기구·이종걸·
성일종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0. 함진규·송석준·김성원·박덕흠·
김상훈·이찬열·송언석·강석진·이은권·
이주영 의원 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7. 10. 강훈식·박홍근·안호영·민홍철·
송옥주·이규희·김영진·최인호·조응천·
신창현·고용진·신동근 의원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19. 7. 10. 안규백·김철민·유동수·김진표·이
수혁·이동섭·전현희·서청원·최재성·노
웅래·이춘석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0. 강훈식·이원욱·박홍근·안호영·
민홍철·송기현·송옥주·이규희·김영진·
전혜숙·최인호·조응천·정세균·신창현·
고용진·신동근 의원 발의)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0. 이상민 · 이종걸 · 이철희 · 김종민 ·
어기구 · 박정 · 기동민 · 이용득 · 위성곤 ·
김철민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9. 7. 10. 김기선 · 이진복 · 이명수 · 김진태 ·
주광덕 · 권성동 · 김한표 · 윤한홍 · 이만희 ·
이철규 · 곽대훈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0. 오신환 · 최도자 · 임재훈 · 채이배 ·
유승민 · 지상욱 · 하태경 · 이혜훈 · 신용현 ·
유의동 의원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0. 김도읍 · 김태흠 · 정갑윤 · 김선동 ·
정운천 · 추경호 · 이종명 · 김정재 · 곽대훈 ·
주호영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7. 10. 김도읍 · 김태흠 · 정갑윤 · 김선동 ·
정운천 · 추경호 · 주호영 · 이종명 · 김정재 ·
곽대훈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0. 김도읍 · 김태흠 · 정갑윤 · 김선동 ·
정운천 · 추경호 · 주호영 · 이종명 · 김정재 ·
곽대훈 의원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7. 10. 임이자 · 정갑윤 · 김승희 · 김성원 ·
문진국 · 장석춘 · 홍문중 · 김학용 · 정병국 ·
원유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2019. 7. 10. 김정우 · 송영길 · 기동민 · 김민기 ·
정성호 · 강병원 · 원혜영 · 김영진 · 김정호 ·
김두관 의원 발의)

이상 1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와의 갑을 관계에 관한
질문서**

(2019. 7. 10. 윤영일 의원 제출)